제 21회 정기학술심포지엄

사회 : 이권희(일본연구소 책임연구원)

13:30~13:50 접수 및 등록
13:50~14:00 개회사 (정 형 단국대 일본연구소장)

◆ 기획주제: < 21세기 미래지향을 위한 한일관계의 재조명 >

14:00~14:40 한일 양국 간 상호인식의 특성과 전망 1
– 하우봉(전북대 교수)
지정토론 – 이 광래(강원대 교수)

14:40~15:20 한일의 역사대화 -'역사교과서문제'해결을 위한 오딧세이 0 1
– 정재정(서울시립대 교수)
지정토론 – 김유경(경북대 교수)

15:20~15:40 휴식

15:40~16:20 일한 매스컴 편집간부 세미나 40년의 교훈 5 3
– 下川正晴 (한국외대 객원교수, 마이니치신문 전 논설위원)
지정토론 – 황영식(한국일보 논설위원)

16:20~17:00 북일관계의 전망과 한일관계 6 5
– 강태훈 (단국대 교수)
지정토론 – 이원덕(국민대 교수)

17:00~18:00 종합토론 4 6
사회 – 정 형(단국대 일본연구소 소장)
토론 – 이광래(강원대 교수), 김유경(경북대교수)
황영식(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원덕(국민대 교수)

Reception
1. 時間 : 18:00~19:00
2. 장소 : 난파음악관 1층 로비

한일 양국 간 상호인식의 특성과 전망

– 하우봉(전북대 교수)

지정토론 – 이광래(강원대 교수)

프 로 필

하우봉 (河宇鳳, 전북대학교 교수)

서울대, 문학박사. 한일관계사 전공.
日本 東京大學 客員敎授. 영국 오스포드대학 객원교수. 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 개권교수.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전일본사상사학회 회장
주요 저서 : 『에도시대의 실학과 문학』,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환류하는 문화와 미』
외 다수.
주요 논문 :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외 다수

한일 양국 간 상호인식의 특성과 전망

하 우 봉(전북대)

1. 상호인식의 의의

한국과 일본은 흔히 '일의대수(一衣帶水)'로 표현되듯이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유사 이래 유구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양국은 서로의 역사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근대이전까지는 한국이 중화문명의 매개자로서 문명화의 역할을 하였고, 근대이후로는 일본이 서구문명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교대하였다. 그런데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컬어진다.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에 비해 심리적인 거리는 멀다는 의미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교류의 진전되고 정부차원에서는 선린우호(善隣友好)가 제창되고 있지만 양국민의 정서적 괴리감은 여전히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다. 시대적 조류와 미래를 바라볼 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호인식 상의 갈등은 인접국가 간에 있을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한일 간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인식이란 감성적인 이미지를 넘어 이성적인 판단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다 복합적이다. 한 민족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으로 체험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일 것이다. 역사적인 집단체험의 소산으로서의 이미지가 누적되면 하나의 정형화된 관념으로 정착된다. 이러한 관념 내지 신념체계를 본고에서는 '인식(認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것이며 교육에 의해 전승된다. 장래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또 인식은 자기실현성이 있다. 민족 간의 상호인식이라고 하면 교류와 외교관계 등을 통해 형성되지만 동시에 장래의 태도·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한일 간에는 이것이 외교정책 및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일 간의 상호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양국관계뿐 아니라 미래에의 전망도 얻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상호인식의 개선이야말로 한일관계의 관건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을 고찰하는 방식으로서는 크게 사회심리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심리적 방법은 가해자·피해자 관계라는 심층심리적 분석을 통해 갈등관계의 심리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갈등관계의 일반론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 한일 간 인식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가해자의식과 피해자의식의 격차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일관계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하다. 한국과 일본의 각종 조사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의 부정적인 일본관의 가장 큰 요소는 '역사인식의 갭' 또는 '일본인의 역사에 대한 자세'로 나와 있다. 한일 간 상호인식의 문제에는 현상분석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역사적 요소가 보다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역사적 요인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2. 상호인식의 특성

한일 양국인의 상호인식에 대한 역사적 전개양상을 조망해 보면,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해바라기성 주변문화의 갈등양상'이다. 문화에는 중심을 향하는 해바라기적 속성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의 전개과정을 보면 누가 더 문화의 중심부에 가깝게 있느냐 하는 문제로 우위를 다투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문화의 중심이 중국에 있었던 전근대시기에는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웠던 만큼 '소중화(小中華)'로서 일본을 문화적으로 변방시・야만시하였다. 변경에 처했던 일본은 19세기 중반 새로운 서구문명이 밀려오자 주변성에서 탈피하여 새 중심에로 나아갔다. 국제질서와 문화의 중심이 서양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확인되자 일본은 과감하게 아시아를 벗어났으며, 그 새로운 관점에 서서 조선을 미개・야만시하였다. 문명관과 상호인식에 큰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변경의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상대방의 중심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류(亞流)로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전근대시기 한반도로부터 문물을 수용하였으면서도 중국문화의 아류로 취급하였고, 근대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문화를 수용하였으면서도 서구문화의 아류라고 하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둘째, 상대에 대한 인식이 우월감 속의 열등, 열등감 속의 우월이라는 분열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까지는 한국의 문화선진・전수의식과 일본의 무력우위의식의 대립이라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 일본은 문화열등과 군사우월이라는 복합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대세가 역전되었다. 이 시기 한국은 일본에 대해 전통적인 문화우월감・적대감과 현실적인 군사강국・근대선진국이라는 현실 사이에 자기분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열적인 복합심리 속에서 양국은 모두 열등감을 부자연스러운 자존자대(自尊自大)로 표현하였고, 그것을 통해 감정적인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셋째, '근친증오' 현상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고대 이래 인종과 문화적 요소에 있어서 공통적 요소가 많다. 그러다가 긴 세월의 역사적 경험과 환경적 조건에 의해 이질적인 의식과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접촉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크게 보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양국은 '대동(大同)'보다는 '소이(小異)'에 집착하면서 상호멸시관을 가지고 있었다.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고 평가에 아주 인색한 점도 공통적이다. 이는 '근친성(近親性)'이 요인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라이벌의식의 소산이라고 보인다. 사실 근친증오현상은 한일양국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1)]

---

1) 근친증오현상은 한・일 양국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林建彦은 영국과 독일,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관계와 상호인식을 예로 들면서 '확실히 가까운 나라일수록 비뚤어지게 보이는 현상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1백년에 이르는 '征韓'의 시대를 통하여 '왜곡'을 일방적으로 증폭시킨 것은 일본이었다면서 그 왜곡된 관계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교린관계를 열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주장의 수용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近い國ほどゆがんで見える□　, 1982, サイマル出版社, 272쪽)

한편 양국민간의 상호혐오 내지 증오가 지속되고 증폭되는 현상 속에는 거울효과(mirror effect)라는 측면이 있다. 거울효과란 한 쪽의 적대감정이나 무시 등의 현상이 다른 쪽에 전달되거나 알려질 경우 그에 대응하는 형태의 반응이 나와 상호인식상의 갈등이 악순환, 증폭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내의 반일감정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염한론(厭韓論) 내지 혐한론(嫌韓論)이 제기되고 일반국민에게 확산되어 가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한일 양국 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으며 특히 매스컴에 의해 증폭되는 경향성이 있다.

넷째,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현상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양국 모두 변방문화의식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인다. 고대의 대립양상으로는 한국의 일본이적관(日本夷狄觀)과 일본의 조선번국관(朝鮮蕃國觀)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고대부터 조선중심의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해 일본을 오랑캐(夷狄)로 설정하였다. 고대 일본의 민족명이자 국명이었던 '왜(倭)'라는 호칭은 그대로 정착되었고, 고대 이래 지속된 '왜구'에 의해 이러한 인식은 고착되어 갔다. 조선시대 한국인들 또한 일본을 '왜'로 표상화 하였다. 공식적인 외교문서에는 '일본(日本)'으로 표기했지만, 통상 '왜', '왜국', '왜인'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왜'는 문화의 저열성과 야만성을 상징화하는 코드였다.

한편 일본의 조선번국관(朝鮮蕃國觀) 내지 '서번의식(西藩意識)'은 신공왕후의 '삼한정벌(三韓征伐)' 이래 한반도의 국가인 신라・백제・임라가 일본에 복종・조공하였다고 믿는 인식이다. 이른바 '일본서기적 사관'으로서, 일본인의 한국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이래 뿌리 깊게 각인되어 중세를 거쳐 에도시대에도 연면히 전승되었다.[2)]

전자의 구도 하에서 일본은 이적(夷狄)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후자의 인식 하에서 조선은 '서쪽의 번국(西蕃)'으로 설정되었다.[3)] 또 조선후기에 체계화된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4)]와 에도시대에 확립된 '일본형화이관(日本型華夷觀)'[5)]의 대립양상도 좋은 보기이다. 민족주의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외적 분쟁과 대내적 경직화를 초래한 역사적 사례가 많다. 하물며 독선과 배타성을 지닌 자민족중심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한일 양국에서 논의되는 세계화, 국제화의 구호 속에는 민족주의의 세계적 확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일정부분에서는 필요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신민족주의'와 세계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조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걸려 있는 과제이다.

---

2) 三宅英利, 「朝鮮觀の史的展開」(1982; 하우봉 역,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 1990, 풀빛) 및 金光哲, 「中近世における朝鮮觀の創出」(1999, 校倉書房) 참조.

3) 에도시대 초기 林羅山, 중기의 新井白石, 18세기말 懷德堂 4대 학주(學主)였던 中井竹山, 국학(國學)의 거두인 本居宣長 등이 일본서기 이래의 조선번국관을 계승하여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한국관은 막부 말기의 지사들에게 수용되었고,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지배적인 한국관으로 정착되었다. 막부말기 대외적 위기 속에서 해방론자(海防論者)인 林子平, 佐藤信淵 등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침략론을 제기하였고, 그것은 메이지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자리잡았다.

4) 조선중화주의 개념과 성격에 관해서는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1998, 일지사) 및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파의 대외인식>(『한국실학의 새로운 모색』, 2001, 경인문화사) 참조.

5) 일본형화이의식의 개념과 성격에 관해서는 荒野泰典의 『近世日本と東アジア』(1988,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3. 전망과 제언

유사 이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한일관계는 때로는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지속해 왔다. 현재의 상호인식은 수천 년간에 걸친 집단적 체험의 산물이요, 역사퇴적의 결과이다. 따라서 간단히 바뀌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근대에서의 '잘못된 만남'에 의한 갈등은 아직 청산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멍에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화와 세계화시대의 21세기에는 양국은 평등한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상호이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양국간의 인식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본래적 의미의 선린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결단과 실천적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일양국의 관계와 상호인식의 추이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우선 낙관적 요소로는 ① 활발한 상호교류 ② 세대 교체 ③ 지식과 이해의 증가 ④ 양국관계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비관적 요소로는 ① '과거'에 대한 인식의 격차 ② 일본 내 보수우경화 등 민족주의 강화현상 ③ 경제부문의 마찰적 관계 심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양 국민 간에 우호적인 상호인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낙관적 요소를 늘리고 비관적 요소를 줄이는 작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뿐 무슨 특효적인 처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단지 후자를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해보면, ① 역사공동연구를 통한 역사인식의 갭 축소, ② 선린우호의 역사 재조명, ③ 文化相対主義(cultural relativism) 내지 文化多元主義(cultural pluralism)적 인식의 일반화, ④ 국가나 정부단위만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主體들에 의한 복합적인 主題들에 대한 교류가 요청된다. 특히 시민연대운동에 의한 교류의 확대를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기대해 본다.[6)]

21세기 한일 양국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한 모습일까?

세 가지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① 대립과 갈등의 영국-아일랜드 모델, ② 종속적 관계의 미국-중남미 모델, ③ 대등적 선린의 프랑스-독일 모델이 그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독일 모델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이를 한일관계와 비교해보면 1963년 국교정상화 단계에서 독일의 정중한 사과가 있었고, 프랑스도 그것을 흔쾌히 수용하였다. 그 후의 양국의 교류가 대등하여 무역불균형이 거의 없으며, 독일의 자발적이고 엄격한 과거청산 노력이 프랑스를 비롯한 주변국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었다. 독일 통일 당시에도 프랑스는 반대하지 않고 협력해 주었다. 한일 양국도 이와 같이 상호의존적으로 공존하면서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공생질서(共生秩序)를 구축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구조의 형성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민의 새로운 인식과 자세가 필요함은 물론이

6) 이에 대해서는 河英善, <탈근대 지구질서와 한일관계의 미래>와 木宮正史, <한일시민사회의 관계 구축을 위한 조건>(□ 한국과 일본□ , 1997, 나남출판) 참조.

다.

우선 한국인은 화해의 정신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구하는(反求諸己)'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일간에 과거를 둘러싼 더 이상의 감정적 대립이 청산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 이 문제는 이제 한국을 위해서도 확실한 매듭이 지어져야 할 시점이다. 피해자로서의 역사의식이 너무 강해 현실과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그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조류와 세계적 질서재편의 시기를 맞아 한국은 시야를 넓히고 능동적 구상으로 주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에 따른 대증요법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철학과 이념적 자세를 갖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입각한 다양하고 유연한 대일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본인에게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와 '진정한 국제화'를 요구하고 싶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선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깨끗한 청산과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일본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제적인 규모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아시아인들끼리의 성숙한 만남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죄할수록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잘못을 인정하면 호국영령을 모독하게 된다는 발상은 너무나 소아적이고 유치한 인식이다. 엄연히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오는 멍에를 언제까지 지고 갈 것인가? 명확한 인정과 반성 위에 상대방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훨씬 떳떳하고 성숙한 태도임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들과 진정한 우호를 나누려면 일본은 국제화의 정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화가 제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내면화되지는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최근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역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독특한 신국사상(神國思想)과 배타적 선민의식(選民意識)의 틀을 깨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과 이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임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결코 국제인, 국제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신도(神道)라는 민족종교에서 벗어나 보편사상으로 환골탈태할 수는 없을까? 일본의 지식인과 사상계에 간절히 바라고 싶은 사항이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되어버린 느낌이지만 한일 간에 선린우호의 궁극적인 방향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점과 관련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씨가 주장한바 '주체(主體)와 공생(共生)'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시사를 준다. 그는 일본인의 주체의식과 책임의식의 부족함에 대해 '애매한 일본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우선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그 자아실현의 확대과정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해야만 공생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로 엄중하면서도 개방된 사고방식이며 세상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개체와 전체, 특수성과 보편성의 동태적 조화이며, 민족과 문화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성에의 추구와 수렴을 놓

치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00년 전 공자(孔子)가 군자의 자세라고 말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과도 상통하는 것 같다. 군자란 천명(天命)을 알고 따르는 자인데 요즈음말로 하면 '세계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한일 신시대의 평화공존을 가능케 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양국 모두 진정한 국제화를 실천하는 바탕위에서 '성숙한 세계인'으로 만나는 것이다.

21세기의 한일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和而不同) 군자들 간의 교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같으면서도 화합하지 못하는(同而不和) 소인들의 사귐이 될 것인가?

일본의 결자해지(結者解之), 한국의 반구제기(反求諸己), 그리고 양국민 모두 성숙된 세계인으로 만나는 화이부동적 공존. 내가 상상해보는 미래의 한일관계의 모습이다.

지정토론

이 광 래(강원대)

21세기 한일관계의 조건

1.

관계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그것도 존재방식의 문제다. '홀로살기'에는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더불어 존재하려면' 그것은 불가피한 조건이다. 관계는 공존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공동선(共同善)이 절대적 가치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공존의 관계를 위해서는 공동선을 지향하려는 선의지가 상호인식보다 선행해야 한다. 선의지가 대상인식을 인도해야 공존을 실현할 수 있다. 인식은 말과 글로 하지만 의지의 실천은 마음과 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존을 위한 공동선은 무엇일까?

2.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상호인식의 개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도 독존하려 하지 않는 한 공존관계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한일관계는 공동선 위에서만 가치실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호인식보다 근본적이어야 하는 것이 공동선을 실현시키려는 선의지(善意志)다. 양국민 모두에게 물어야 할 것도 공존을 위한 선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적극적인지(?)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선의지의 자가실험 기간이다. 일본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실종된 선의지를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1894-5년의 청일전쟁, 1904-5년의 러일전쟁, 1905년-1910년의 한일협약에서 한일합방,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918년의 북진과 시베리아출병, 1927년 장작림 폭살사건, 1931년 일본관동군의 만주사변, 1933년 국제연맹 탈퇴, 1936년의 중일전쟁 시작,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개시, 1941년의 진주만 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역사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1945년의 원폭에 의한 패전은 20세기 전반부에 가중되어온 역사의 피로감이 피로골절(疲勞骨折)을 초래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역사적 피로감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일본은 역사의 피로골절에서 완치되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치유받기 위해 야스쿠니신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들이 독도나 센가쿠 열도의 허상을 통해 잃어버린 조선과 만주국에 대한 허탈과 공허를 달래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일본인은 아직도 전쟁중독증에서 해독(解毒)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당사자이면서도 독일과 다른 것은 전쟁중독의 기간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독기간은 독일보다 훨씬 길다. 회복이 더딘 이유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중독피해는 독일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회복이 쉽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독일인보다 일본인에게 공동선에 대한 선의

지가 부족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프랑스인들의 선의지, 즉 독일에 대한 용서가 쉬운 것은 국가적 자존심이지 국민적 희생과 치욕이 아니었다. 나치가 노리는 희생의 대상은 프랑스인이라기 보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프랑스인이 독일인과 적극적으로 공동선의 실현을 노력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독일이 프랑스인이 아닌 이스라엘인에게 학살한 유태인의 숫자만큼 벤츠 자동차를 무상공급하는 이유, 즉 참회(懺悔)의 선의지를 실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4.

한국과 일본은 반세기간 입은 정신적 외상(外傷), 즉 트라우마(trauma)가 다르다. 일본이 광기로 인한 패전의 외상이었다면 한국은 식민의 상처였다. 그래서 치유방식도 각자 달라야 한다. 같은 기간에 입은 두 나라의 트라우마가 인과관계를 가지면서도 이질적인 외상이기 때문에 치유가 쉽지 않다. 한국인의 트라우마는 한국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방적 피해였음에도 가해자의 자가회복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유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인이 고통의 인내와 치유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국에는 드골과 프랑스인의 용서하는 아량이 필요하지만 일본에는 어느 때보다도 정직한 아데나워와 용기있는 브란트의 존재가 절실하다. 가해자의 사과와 사죄는 용기있고 솔직해야 하고 피해자의 용서는 너그럽고 따듯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죄와 용서 이외의 어떤 선의지도 양자간에는 공동선이 될 수 없다.

한일의 역사 대화

– 정재정(서울시립대 교수)

지정토론 – 김유경(경북대 교수)

프 로 필

정재정 (鄭在貞,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대, 문학박사, 한국근대사 전공
전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현재 한국사학회 이사.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및 동 지원위원회 위원.
주요 논문 : 「한일 공동 역사교재안의 검토」 「反日 내셔널리즘의 기원」
「역사연구의 동향과 역사교과서의 기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한국사관련 서술의 변화] 외 다수.

한일의 역사 대화

– '歷史敎科書問題' 解決을 위한 오딧세이 –

정 재 정(서울시립대)

머리말

한국과 일본이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새로 갈등을 빚은 지도 어언 1년이 지났다. 그 동안에도 한일 사이의 민간교류는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정부레벨의 대결자세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두 정부가 역사인식의 골을 그 만큼 깊고 넓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양국이 이웃 나라로서 국제화세계화가 지구 규모로 확산되는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레벨은 물론 민간레벨에서도 역사대화를 끈질기게 나누어갈 필요가 있다. 역사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역사인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의 역사대화는 전문가끼리의 역사연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와 교육자를 비롯하여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나 역사교과서를 화제로 삼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흔히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의 기본교재이고, 역사교육은 그 나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한일의 역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역사대화, 특히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를 화제로 삼는 역사대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나름대로 역사대화를 나눠왔다. 한국과 일본이 오늘날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교류를 증대해온 배경에는 이들의 공로가 적지 않게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한일의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의 현황, 그리고 역사대화의 주요 경과에 대해서도 꽤 많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아울러 참고한다면 내가 왜 역사대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장하는가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환기를 맞은 한일관계

1) 한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인가?

200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다. 두 나라 정부는 이때를 맞이하여 최근 급속히 깊어지고 있는 양국 국민의 교류와 우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기념행사와 문화이벤트를 개최할 작정이었다. 실제로, 한일관계는 지난 40년간 우여곡절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지금은

연간 4백만 명 이상의 사람이 왕래하고, 약 70조 원(7조 엔)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사이가 되었다. 자국의 대외 경제관계에서 상대방이 차지하는 지위는 각각 1위 혹은 3위에 이를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 그 뿐 만인가. 양국국민의 문화교류에서도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 소나타"가 방영된 것을 계기로 하여 한국문화(요리,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에스테 미용, 한국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위 "한류 붐"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개방을 전기로 하여 일본 문화(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패션, 영화, 일본어 등)를 즐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 사이에서는 소위 "닛폰 필" (Nippon Feel, 일본취미)이라고 하는 새로운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이렇게 개선의 길을 걷게 된 데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의 성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반목과 대립을 되풀이해 온 양국국민 사이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 세계적 규모의 이벤트를 함께 성공시켰다는 성취감이 느껴졌다. 당시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2002년7월 2∽3일"에 의하면, 상대국에 대해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국 54%, 일본 53%로, 반년 전(2001년 11월의 조사보다도 한국은 13%, 일본은 7% 증가했다. 또 이제부터 한일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한국 79%, 일본 79%로 같게 되어, 반년 전에 비해 한국은 27%, 일본은 15% 증가했다.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가 좋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국42%, 일본 74%이었다. 이것으로써 알 수 있듯이, 지금의 "한류 붐"과 "닛폰 필"의 배경에는, 실로 양국이 도모해온 공동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정지작업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이 경험을 토대로 하여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국교정상화 40년의 역사를 축하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장미 빛의 미래를 그리려고 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2) 역사인식의 멍에

그런데 2005년 2월에 들어서서 사태는 일변했다. 한국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여기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새 역사교과서》 의 검정 합격,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등에 관련된 역사인식을 일괄해서 가리킨다)을 비판하는 파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한국 대통령은 "외교전쟁"도 불사한다고 하는 기세로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일본정부가 완강한 자세로 반론을 펴자,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관계는 "한일 우정의 해"는커녕 골이 더욱 깊어지고, 험악한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 탓 때문인가,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공동 여론조사(2005년 6월 10일)에 의하면 , 한국인의 대일 불신감은 90%로 치솟고, 일본인의 대한 불신감은 35%에 이르렀다. 또 지난 10년간 양국국민의 상호이해는 깊어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는 대답은, 일본인은 52.6%에서 52.8%로 약간 증가한 반면, 한국인의 그것은 45.8%에서 27.9%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마련된 NHK의 BS토론 프로그램 (2005년 6월 19일 밤 방영, "일한의 과제 지금 이야기하고 싶다")에 네트로 투고한 일본인의 여론은,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거의 100%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투고 중에는 혐한(嫌韓)의 나

머지 "한국과의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국인이 우려하면서 지켜본 2005년 10월의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일의 역사인식의 골을 더욱 넓게 만들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호와 대립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일의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

(1) 왜 역사인식인가?

대저 근대 이래의 국민국가는 국가에 귀속하는 의식을 가진 국민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국가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제교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식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역사 설화를 철저히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으로서의 자질에 어울리는 역사인식을 기르게 한다.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역사인식을 육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 나라 혹은 다른 나라를 무시해서 극단적인 자국가중심주의라든가 자민족중심주의로 기울면 국수주의 혹은 배타주의로 치닫기 쉽다. 그것이 결국 국가 또는 민족 사이의 전쟁과 학살로 연결된 것은 지난 200년의 세계 역사가 증명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비뚤어진 역사인식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경위가 있어, 지금도 그 잔재가 현안으로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즉,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면, 양국은 아직도 역사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은 침략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이 패전 전의 인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는 반면, 일본은 과거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이미 끝났다는 태도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시각 차이를 잘 나타내는 통계가 있다. 월드컵 공동개최의 직전, 서울대학교와 동경대학의 신문이 양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행한 여론조사(2002년 5월 27일)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서, 서울대학생의 73·2% "역사문제의 청산"을, 동경대학생의 60·7%는 "경제문화의 교류"를 들었다. 또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 서울대학생의 72·8%, 동경대학생의 16·3%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이것을 통해도, 한국인은 역사문제에 분명한 결말을 내는 것을 기대하고, 일본인은 현실교류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문제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의식의 편차를 메우지 않으면, 상호간에 높아지고 있는 우호친선의 분위기는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증폭된 한국과 일본의 마찰과 갈등은, 역사문제라고 하는 마이너스 심벌이 "한류 붐"과 "닛폰 필"이라고 하는 플러스 심벌을 압도해버린 좋은 예일 것이다.

되돌아보면, 2005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계기를 만든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의 강제

체결로부터 100주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지배에서 해방되어 독립한 지 60주년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한 마디이기도 한다. 한국정부는 이 때에 즈음하여 근현대사가 남긴 마이너스의 유산을 정리하는 정책을 잇달아 공포해왔다. 그러므로 역사 전문가들은 어차피 한일 사이에서도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해묵은 갈등이 다시 크게 불거질 것이라고 진작부터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왜 역사의 그림자가 항상 짙게 붙어 다니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역사인식 특히 한국과 관계가 있는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패전 전에 형성된 "식민지사관" 또는 "황국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은 일본의 그러한 인식이 표면에 부상할 때마다 책임을 추궁하여, 서로의 대립과 긴장이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양국의 논쟁을 모두 소개할 만한 여유가 없으므로, 우선 한국 측의 주장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고 싶다. 이때 이야기의 전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국인은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역사교과서에 잘 반영되고, 또 일본인의 역사인식은 그것을 사용하는 역사교육을 통해서 육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다짐해 두고 싶은 것은, 한국인이 일본인의 역사인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지 불행한 한일관계에서 유래하는 경계심 때문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이다. 한국인은 국제화·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타국가·타민족·타지역과의 공존공영 및 상호협조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의 시대에, 과연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현대의 역사인식은 각 나라와 민족의 시민 또는 민중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국의 역사인식은, 정도의 차는 있을망정, 자국중심주의적이이고 내셔널리즘(nationalism)적인 경향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국가 민족 지역 사이의 마찰과 대립을 부채질하고, 국제이해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역액이 국민 총생산의 70%에 달하는 한국은 바야흐로 자국중심주의라든가 내셔널리즘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과 국토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내셔널리즘을 어느 정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과거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을 표방했으면서도 지금은 민주화·다양화·국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은 한국에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들로부터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많다.

(2) 일본 역사교과서의 특징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는 '황국사관'을 불식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크게 공헌했다. 여기에서는 현대 일본인의 역사인식의 방향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교과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 특징은 다양하지만, 우선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국사와 세계사의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 중학교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 관련된 세계사가 끼어 맞춰진 모양이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사와 세계사가 전

혀 따로따로이다. 이 점은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지역 (중국한국타이완북한)에 공통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 나라 사이의 인간과 물자의 교류가 대단히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아직도 내셔널리즘이 강한 것은, 자국사와 세계사의 분리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단계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자세함과 깊이가 각각 다르지만,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되풀이해 기술하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소위 通史를 반복하여 가르치는 형태이다. 이 점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욱 철저할지도 모른다. 이것만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역사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같은 틀의 역사를 되풀이해서 배우는 학생은 역사학습에 질려서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셋째,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의 강력한 행정지도 아래 편찬되는 것. 일본의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라서 써지고, 그 내용과 기술은 검정을 통해서 착실하고 꼼꼼하게 체크된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정가와 분량 등의 범위까지도 제시한다. 선진국 중에서 정부가 교과서에 대해 일본처럼 강하게 개입하는 나라는 없다. 교육부가 자국사의 교과서를 편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본 쪽이 더욱 엄격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지만 한일의 어느 쪽이 교과서를 더 교묘하게 통제하는가에 대해서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

넷째, 세계사 교과서는 세계의 각 지역을 비교적 균형 있게 잘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중심은 서유럽사이고,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는 중국 특히 한민족의 역사가 기둥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대한 서술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 한국의 역사라든가 한일관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실태와 중요성에 비하여, 분량이 적고 내용도 단편적이다. 역사교육이 이웃 나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최근의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사와 한일관계사에 대한 기술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교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자국사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일본사 교과서는 세계사를 별로 기술하지 않는다. 교과서상에서 일본사와 세계사는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국사와 세계사를 관련시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또 자국사를 세계사와는 관계없는 특수한 역사로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에서조차도 자국사와 세계사가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여섯째, 일본사 교과서는 죠몬(繩文)시대, 야요이(彌生)시대, 나라(奈良)시대, 헤이안(平安)시대, 가마쿠라(鎌倉) 시대 등, 일본에서 옛날에 사용한 도구나 권력의 기반이 두어졌던 지명을 딴 시대구분이나 역사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국사의 흐름과 개성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자국사를 세계사 속에서 타국사와 비교해서 파악하는 데는 불편하다. 이 배경에는 일본사를 특수사 또는 고유사로서 신격화하려는 의도가 잠재해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점만을 보면, 내셔널리즘의 성격이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자국사 교과서보다도 일본의 자국사 교과서가 더욱 폐쇄적이고 국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선되어온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일관계사 기술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한국의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 특징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는데, 여기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기술의 방법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역사에 관련되는 기술의 분량과 내용이 대단히 소홀하다는 점이다. 350~380페이지 정도의 고교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사에 관련된 내용은 2·8%(일본사 교과서에서는 4·5%,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1·3%)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과 북한에 관한 내용을 합친 분량이다. 중학교의 교과서도 거의 같은 비율이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교육이 한국사의 취급을 경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다지 배우지 않는 일본의 학생은 당연히 한국의 역사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고 또 그에 대한 관심도 적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일관계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반대로 한국의 학생은 한일관계사, 특히 근대의 한일관계사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과 한국의 학생은 한일관계사에 대한 지식의 분량과 시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에 관련되는 내용의 기술은 1994년 이후 상당히 바뀌었다. 그 이전에도 문부과학성의 부분 검정을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1978년에 시행된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게 지나지 않았다(이하, 이 시기의 역사교과서를 구교과서라고 부르기로 한다). 1982년에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파문을 일으킨 소위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사건"은 이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한 검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1994년 이후의 역사교과서는 1989년에 개정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여 검정을 받았다. 그 이후 문부과학성은 "이웃 여러 나라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검정을 완화했기 때문에, 교과서의 집필자와 출판사는 일본의 아시아침략과 식민지지배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었다 (이하, 이 시기의 역사교과서를 신교과서라고 부르겠다. 단, 신교과서에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의 역사교과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교과서는 2000년의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라 교과서의 분량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한국사 관련 부분도 상당히 적어졌다. 이 교과서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본의 신교과서에서는 한국사에 관한 기술이 구교과서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1982년의 역사교과서의 "왜곡사건" 이래, 한일 사이에서 논의의 표적이 되어 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에 관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개관해 보자.

첫째, 출판사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신교과서는 일본의 한국침략과 식민지지배에 관한 기술의 분량을, 구교과서보다 1~2페이지 늘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교과서가 "의병운동", "황국신민화정책", "강제동원(징병 징용 종군위안부 등)", "한국인의 항일운동" 등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었다. 특히 1994년부터 고교, 그리고 1996년부터는 중학교의 신교과서 대부분이 "종군위안부"에 대해 기술하게 된 것은 주목해야 할 경향이었다. "자유주의사관"을 표방하는 우파 내셔널리스트(nationalist)가 신교과서에 대하여 공세를 강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들의 교과서 공격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2002년 이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종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둘째, 신교과서에서는 지금도 한일 사이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전후 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강제연행과 원폭피해자 문제를 다룬다든가, 인권운동과 관련해서 재일 한국인·조선인의 차별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역사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당면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신교과서는 한일연대의 사실을 찾아내어 소개하고 있다. 몇 개의 신교과서에서는 비록 그 수는 적고 또 그 시도가 소극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에 비판적이었던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이시바시 탄잔(石橋심山) 등의 사상과 행동을 소개했다. 이것은 역사를 배우는 세대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한일관계의 개선에 진력할 것을 기대하는 포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선한 기술방식은 한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에도 영향을 주어, 위와 같은 일본인의 이야기가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다. 교과서의 국제개선운동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 틀림없다. 다만,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오히려 "근대화를 도왔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사관" ("새 역사교과서")이 확산되는 오늘의 일본에서, 지극히 미미한 수의 일본인이 소극적으로 표명한 인도적 사상과 행동을 부각시키는 일이 도리어 일본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반론이 한국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근현대의 한일관계사에 관한 기술에서, 신교과서는 구교과서보다 분량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일본정부가 1982년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이후 교과서검정에서 "이웃 여러 나라에 대한 배려"의 자세를 취해온 점, 집필자와 출판사가 "이에나가(家永)교과서재판"의 지원운동 등을 통해서, 서로 연계하면서 교과서개선에 힘써 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서, 일본 한국의 역사연구자, 역사교육자, 역사교과서집필자 등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교과서개선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온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개의 앙케트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기술의 개선은 일본학생의 한국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한국사관에는 우월감과 차별의식이 조금 숨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태보다 다소 높게 평가하는 면도 보인다. 한국인은 민족의식, 단결심, 주체성, 문화수준, 창조성 등은 강하지만(높다), 외래문화의 섭취능력, 침략성, 경제관념 등은 낮다(약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견해는 엄격하다. 일본학생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과 보상 등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끝났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희망하지만, 역사인식을 화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느낀다.

그런데 개선되고 있던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일관계사 기술은 최근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2년부터 사용하게 된 중학교의 역사교과서는 수업시간의 감소에 따라 교과서의 분량 그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 탓도 있어서 그런지 종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 한일관계사 기술은 아주 적어졌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다음에 언급하게 되는 "새 역사교과

서"의 출현에 자극을 받아서, 그 내용도 일본 내셔널리즘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기우러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한일 사이의 역사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상당히 바뀐 한국의 역사교과서

종래 한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는 근대에서의 일본의 침략과 지배, 해방 이후에서의 민족과 국토의 분단 등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 때문에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는 애국심과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부추기고, 자국사의 주체적·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예를 들면, 전근대에서는 높은 문화수준을 자랑하고, 근대에서는 불굴의 민족독립운동을 칭찬하며, 현대에서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신장 부각시키고, 국제사회에서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때로는 한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국수적”, “반공적”, "반일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말미의 참고문헌에 게재한 앙케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인식을 배운 한국학생의 일본인식은 신랄했다. 그들은 일본의 역사에 대하여 단편적 지식밖에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일관계사라는 창구를 통해 일본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학생은, 일본이 전근대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배운 반면에, 근대에서는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배은망덕(背恩忘德)의 나라라고 본다. 그들은, 일본의 역사에서 왜(고대), 왜구(중세, 근세), 왜군(근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 황군(근대), 자위대(현대)가 연속선상에서 계승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현대의 한일관계에 관한 이해는 대단히 부족하고 일면적이다. 그 결과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현대 일본의 역량을 경시하고, 대일본제국의 유제가 지금도 온존하고 있다고 본다. 천황제, 일장기, 기미가요, 정치가의 '망언' 등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이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일본은 민족의식, 단결심, 침략성, 경제관념, 주체성, 외래문화의 섭취능력 등은 강한 (높은) 반면, 문화수준과 창조성 등은 낮다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대체로 일본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면서도, 양국이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육개혁, 즉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역사교육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역사교육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단계별로 심화되도록 구조화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사와 人物史를 통해서 역사 감각을 몸에 익히게 하고,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를 배운 후, 고등학교에서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나누어 分類史를 공부하는 형태인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시간이 종래의 분량보다 1시간 줄어들고, 교과서도 상하2권 (합쳐서 430여 페이지)에서 1권 (360여 페이지)으로 축소되었다. 그 대신에 개정된 교과서에는 참고자료라든가 도판 등이 많이 삽입되었다.

둘째, 내용의 취급이 探求型, 다시 말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학습에 빠져들게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 때문에 "읽기자료", "심화과정" 등의 항목이 새롭게 꾸며졌다.

셋째, 판형이 커지고 다색 인쇄로 간행되었다. 종래의 교과서가 흑백의 단조로운 인쇄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개정된 교과서는 외관만 보면 상당히 호화로운 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도록 편찬된 "국사" 교과서의 바뀐 모양도 중학교 "국사"의 그것과 대개 비슷하다. 단지 내용의 구성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류사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편찬에 임하여 의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리하여 원래의 편제와 내용에 수정이 가해졌다. 고교 1학년생의 "국사"는 원칙으로서, 근대 이전까지 취급하는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근현대사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고등학교의 심화선택과정으로서 "한국근현대사"를 설치하고, 별도의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는 선택과목이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자국의 근현대사를 배우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어났다. 정부는 재빨리 보완책으로서 "국사" 교과서에 근현대사의 개요를 덧붙이기로 했다. 이것은 모처럼 마련한 "한국근현대사"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역사교육 또는 역사교과서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종 교과서' (소위 국정교과서)로서 편찬되어 온 "국사" 교과서 제도가 부분적이나마 폐지된 것이다. 고등학교 2~3년에서 배우는 "한국근현대사"는 일본과 대개 같은 방식의 검인정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되돌아보면, 한국에서도 '1종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전부터 높았다. 그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역사교육을 정권유지의 이념적 도구로서 이용하기 쉬워진다.

둘째, 학생에게 획일적인 역사내용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셋째, "국사" 교과서를 聖典視 또는 絶對視 하거나 시험을 위한 준비서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모든 사실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흑백논리로 이해시킬 우려가 있다.

다섯째, 학문적 연구 성과의 수용을 늦추는 우려가 있다.

여섯째, 창의적인 서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제로 교육 당국자는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사" 교과서 집필자의 위촉에 애를 먹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근거로 해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을 과감하게 검인정제도로 전환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판에 부딪쳐서 애를 먹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가 현정권(당시는 김대중 정권)의 실적을 매우 미화한 반면에, 전정권의 공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었다. 소위 형평성의 상실과 정부의 압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최근(2004년) 한 번 더 비판에 직면한 것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크게 기술하고, 또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그다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무시하고, 또 남한의 현대사는 어두운 부분만을 부각시켰다는 것이었다. 사실의 선택과 취급의 공평, 즉 균형 감각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러한 공방은 어느 나라의 역사교육에서도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즉 교육과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실의 선택과 내용의 기술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 이데올로기와 역사기술의 긴장관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물음을 둘러싼 논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교과서와 그 검정을 둘러싼 한국 내부의 갈등은 앞으로 교과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한국이 이와 비슷한 과정을 이미 겪어온 일본과 역사대화를 나누는 데도 유익한 재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3.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과 한일의 역사 갈등

(1) 후퇴한 "새 역사교과서"의 한일관계사 서술

최근 한국에서는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육자라든가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외무장관조차도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정치외교 문제로 삼고 있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든 중학생용의 "새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여 2002년부터 극히 소수이지만 학교교육에서 정식으로 사용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새 역사교과서"를 문제 삼는 것인가? 한국인은 이 교과서의 등장이 패전 전의 "식민지사관" 혹은 "황국사관"의 "새로운 부활" 또는 "새로운 변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여론은 "새 역사교과서"가 한일관계사를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일본은 고대에 한반도에 세력을 뻗치고 그 남부를 지배했다. 검정 합격본에서는 "임나일본부"등의 실재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은 지워졌지만, "임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세력의 기반을 유지했다고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패전 전에는 "임나일본부"를 "조선총독부"에 빗대어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 정당화 하는 데 이용했다.

둘째, 역사적으로 보아서, 한국은 중국에 복속한 비자주적인 국가이었는데 비하여, 일본은 중화질서로부터 벗어난 자주적 독립국가이었다. 전근대의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조공책봉체제가 외교질서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 강도는 베이징에서의 거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베이징 가까이 육지로 접하고 있는 조선이 바다에 의해 격리되어 있는 일본보다 중국의 압력을 강하게 받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이 교과서는 조공책봉에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나라의 주체성과 독립성의 강약의 관점에서 자꾸 비교해 보여준다. 패전 전의 "식민지사관"도 한국사의 "他律性"과 "事大性"을 강조하고 한국인의 독립정신이 나약하다고 폄하한 적이 있다.

셋째,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국내외의 정세에 예민하게 대처해서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해서 근대화에 실패했다. 이것은 일면의 사실이지만, 이 관점에서는 일본 스스로가 근대화로 나아가는 한국의 움직임을 밟아 뭉갰다고 하는 사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교과서는 일본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라는 점만을 강조한다.

넷째, 지정학적으로 보아서, 한반도는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서는 열강에 앞질러서 이곳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정의 과정에서 "흉기"라고 하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그 주지는 합격본에 그대로 살아 있다. 이런 논리는 패전 전부터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을 정당화하고, 또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 하는 데 힘을 발휘해왔다. 이 논자들에게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다섯째, 한일관계사상의 사건에서 일본은 대개 올바르고, 한국은 잘못을 범했으므로,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 이 교과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마찰과 대립, 침략과 지배의 원인을 한국 측에 뒤집어씌우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말로 자국사중심주의의 전형이다. 패전 전의 "식민지사관"도 대부분 그랬었다.

여섯째,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에 노력했지만, 한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한국을 "병합"해서 개발에 착수했다. 제국주의가 침략과 지배를 할 때 수탈과 개발을 병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수탈을 하기 위해서 개발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의 직접지배를 관철한 일본제국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이 교과서는 수탈의 면에는 눈을 감고, 개발의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 역사교과서"의 견해에 대하여, 한국인은 일본사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사가 헐뜯어져도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분노를 느낀다. 또 패전 전의 역사인식이 부활하여 잊히려고 하는 과거의 불행한 상처를 들쑤셔 놓지 않을까라고 우려한다. 학문적인 면에서는, 전후 60년 동안 일본이 이룩한 민주주의적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된 것이 더욱 유감스런 일이다.

(2)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일 사이 갈등의 재연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의 여론은 일본이 "일장기" "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서 법제화하고, "자유주의사관"을 표방하는 역사연구자 역사교육자 문화인 정치가 등이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고양하기 위해서 역사수정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패전 전의 '황국사관'과 비슷한 역사인식이 다시 당당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심을 품었다. 그런 자세는 2000년 이후 일본이 유사입법 등을 단숨에 해치우고,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보고 한층 더 강해졌다.

원래 한국인은 일본의 皇國史觀的 역사인식이 단순한 역사연구 역사교육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 정당화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온 것을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단지 최근에 일본의 사정에 밝은 일부의 연구자가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1982년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웃 여러 나라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문부과학성의 방침 아래 점진적으로 개선의 길을 걸어왔음을 소개하여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완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마침 김대중정부는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개방하는 등의 "대일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한일관계가 상호이해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은 일본인이 황국사관적 한국사관에서 벗어나서 참된 우호친선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한국인이 오랜만에 일본에 대하여 이렇게 호감을 품게 된 시점에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당당하게 부추기는 "새 역사교과서"를 편찬했

다. 그리고 이것이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한 것은 물론이고, 극히 일부에서나마 학교교육에서도 공식적으로 가르쳐지게 되었다. 이런 사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움트기 시작한 상호이해의 싹을 짓밟아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국민의 여론에 밀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또 35항목에 달하는 수정요구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강경한 태도에 놀란 일본정부는 오부치 총리대신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한 '파트너십 선언'(1998년 10월)의 역사인식, 다시 말해 "식민지지배에 의해 엄청난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변함이 없다고 되풀이해서 변명했다. 또 "새 역사교과서"는 민간인이 쓴 것으로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아래에서는 정부가 그 교과서의 역사관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한국 측이 일본의 교과서편찬제도를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1년여 동안의 마찰은 양국정부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막을 내렸다. 양국의 정부가 지원한 이 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3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005년 6월에 방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그 업적이 빛을 보기도 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또 열전이 벌어졌다. 2005년 2월부터 에스컬레이트된 역사논쟁과 외교마찰이 그것이다. 양국은 2005년 가을에 정상회담에서까지 역사인식에 대해 심한 논쟁을 벌였지만, 역사인식의 골은 메워지지 않았다. 결국 양국정부는 겨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이번의 갈등은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국민에게 깊은 균열을 가져왔다. 한국인 중에는 일본의 황국사관적 한국사관의 되살아나려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편, 일본인 중에는 역사인식에 대한 한국의 집요한 공세에 대해, "지겨우니 이제 그만해라", "언제까지 사과하란 말이냐", "해도 너무한다, 적당히 해라" 등으로,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역사인식을 둘러싼 심한 마찰도 결국 양국의 "한류 붐"과 "닛폰 필"을 억누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수준의 교류는 이미 역사인식과 정치외교에 좌우되지 않을 만큼 진전되어 있던 셈이다.

4. 한일의 역사대화와 상호이해

(1) 왜 역사대화인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사인식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일견, 양국정부가 이것을 외교문제로 다루어 일거에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용이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다양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포용하고 있는 양국 정부로서는, 국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 이외는 말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양국 정부는 40년 전에 국교정상화 협정을 맺을 때마저도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식민지지배에 대해서 문서로써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패전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1998년 10월의 파트너십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수상은 매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부각료는 식민지지배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게다가, "새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고 학교교육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의 와중에서 양국 정부는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여러 번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그 골은 그다지 메워지지 않고 오히려 양국 국민의 '반일' 반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되었다. 정치가는 항상 국내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서, 양국의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 외교전을 펼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간수준에서 역사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쪽이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양국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공영해가는 수밖에 없는 사이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이 중요하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화는 그 토대를 만드는 핵심적인 작업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표방하고, 인권과 평화 등을 존중하는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면이 많다. 학문과 언론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역사를 화제로 삼는 자유로운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역사대화에서는 역사연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양자는 국민의 역사인식을 육성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 역사대화의 경과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미 20년 이상의 역사대화의 역사가 존재한다. 유럽에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국제대화를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독일과 폴란드 등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 것은 1972년이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일간 역사대화의 역사도 결코 짧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국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는 1976년 일본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를 초청하여 역사대화를 시작했다. 그 해는 한국과 일본이 조일수호통상조약(1876년)을 체결한지 100주년에 해당하는 마디였다. 한국이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재검토하는 역사대화를 시작한 셈이다.

이후 한일의 역사대화는 10년 정도 정체했지만, 1982년에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재개되게 되었다. 초기의 대화에서는 한일이 함께 조직한 역사교과서연구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 때 논의가 초점이 된 것은 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이었다. 역사대화의 개요는 그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매스컴과 서적을 통해서 일반인에게도 알려져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역사대화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대화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연구자와 교육자에서 학생으로까지 넓혀지고, 논의의 대상도 일본의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교과서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교사끼리는 자신의 수업을 사례로서 보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역사와 관련된 여러 학회와 단체는 심포지엄을 열거나 공동연구를 마련했다. 한국에서는 역사교육 연구회, 일본에서는 比較史·比較歷史敎育硏究會가 중요한 회의를 자주 열었다. 양국의 역사연구와 역사교과서를 상호 관련시켜서

철저하게 검토한 것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역사교과서연구회와 동경학예대학의 역사교육연구회이었다. 그 이외에, 학생의 수학여행이나 일반인의 역사관광을 통해서도 상호이해를 넓혀갔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대화는 2002년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을 전후하여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다. 양국의 주요 역사연구단체와 시민운동단체가 각각 연계하여 이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역사대화는 둑이 터진 듯 활발해지고, 토픽의 폭이 넓어진 것은 물론, 논의의 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하나의 실례로서, 양국의 전국규모의 역사연구단체는 2001년 12월부터2005년 2월에 걸쳐서 도교와 서울에서 3차례의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연구,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등의 현상과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 심포지엄에 참가한 사람들은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과 그것에 의해서 야기된 한일의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학문적 대응을 통해서 역사인식의 상호이해를 넓히고자 노력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역사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2002년 5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2005년 6월, 3년간의 연구활동을 정리한 방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임무를 마쳤다. 처음부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가해졌다. 질책의 요점은 이 위원회가 양국의 역사 갈등을 푸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비난을 모면하는 방법으로서, 멤버를 재구성하여 이 위원회를 계속할 것이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연구 테마에 포함시킬 것 등에 합의했다.

(3) 역사대화의 확산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역사대화를 국제적 규모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주로 "韓日兩國型"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대화에서는 그 이외에도 여러 나라가 참가하게 되었다. 몇 개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북한의 역사연구자는 평양 등에서 모여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기술의 경향을 검토하고, 황국사관적인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말하자면, "南北共助型의 역사대화"인 셈이다. 2002년 5월에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같은 해 8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회"에서의 독도문제에 관한 남북학술토론회, 2003년 2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의 강제 인력동원의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 자료전시회"에서의 학술대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남북공조형의 역사대화"는, 2001년 3월에 평양, 같은 해 6월에 금강산에서 열린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남북역사학자의 모임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 목적과 내용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항의하고, 또 진지한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남북공조형의 역사대화"가 어떤 길을 걸을지는 북한과 일본의 외교교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 일본 중국의 3국, 또는 이것에 북한 러시아 등이 참가하는 소위 "동북아시아형의 역사대화"이다. 2002년 3월에 중국의 난징에서, 2003년 2-3월에 일본의 도쿄에서 개최된 "역사인식과동아시아평화

포럼"에는,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한국), 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抗日戰爭研究編輯部(이상 중국), 역사인식과동아시아평화포럼실행위원회(일본)등이 참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의 하얼빈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동북아시아침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 40명의 학자가 참가했다. 일본학술회의역사학연구연락위원회, 역사연구와교육전문위원회, 일본역사학협회는, 2002년10월, 도쿄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역사교과서의 편찬 : 그 역사와 현황"이라고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편찬제도와 편찬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대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더욱 좋은 예로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유럽이나 미국 등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서양연합형의 역사대화"이다.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동서코로키움, 쾰른일본문화회관, 독일 일본연구소는 2002년 9월에 쾰른에서 한국 일본 독일이 참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종합 주제는 "일본과 한국 : 공통의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과제와 전망"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타이프의 심포지엄이 유럽에서의 역사대화를 선도해온 독일에서 많은 서양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한국의 유네스코, 미국의 아시아재단, 독일의 프레드리히 에르베트재단 등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한국·일본·중국·유럽·미국 등이 참가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했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화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범위를 넘어서 글로벌화하고 있는 것이다.

(4) 역사대화의 내용

한일의 역사대화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논의되었지만, 그 중에서 주로 화제가 된 것은 역시 양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상대국의 역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의 기술과 담론이 역사연구의 성과에 비추어 적절한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부분이 주로 화제가 되었지만, 그 이후는 한국 교과서도 포함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술과 수업이 검토 대상이 되었다. 각 회의에서는 양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또 각 회의에 참가한 교사들은 수업의 사례를 서로 보고하고, 학생이 자신의 수업을 듣고 나서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등에 대해서 토의했다.

2000년 이후가 되면 역사대화의 화제는 더욱 풍부해지고, 논의의 내용 중에 건설적인 제언을 많이 포함되게 된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역사교육과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대안의 모색이다. 일본역사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역사문제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역사연구회가 200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한 "21세기의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심포지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가 일본의 "역사왜곡"을 계기로 자신의 역사교육과 역사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을 보여주었다. 그 자리에서는 주로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이 각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 위기를 맞이한 세계사 교육의 정상화 방안,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둘째, 일본의 "역사왜곡"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공동 대응을 시도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난징·도교 등에서 개최한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 한국과 북한이 평양·서울 등에서 연 학술토론회,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학자가 참가한 하얼빈 학술회의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이웃 여러 나라의 유지가 공동 대응의 네트워크를 만든 것은 역사대화의 주요 성과이자 역사대화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의 골을 메우는 방법의 하나로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사교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에 착수한 그룹은 몇 개나 되고 이미 책을 펴낸 예도 있다. "한일공통역사교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서 우호로" (한일공통역사교재제작팀), "한국중국일본=공동 편집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삼국의 근현대사" (일중한삼국공통역사교재위원회)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 역사교재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일관계사를 망라한 것이 아니라 한 항목 혹은 한 시기를 다룬 것이다.

전시대의 한일관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통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그룹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역사교과서연구회와 동경학예대학의 역사교육연구회이다. 그들은 1997년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매년 2회씩 연구회를 열어 왔다. 이 연구회의 전반에서는 양국 역사교과서의 기술 실태와 역사연구의 성과를 상호 관련시켜서 검토했다. 그리고 후반에서는 이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공통 교재의 편찬에 돌입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약 40절의 편별 구성에 따라 원고를 쓰고 서로 검토하면서 고쳐 쓰기를 되풀이했다. 참가자는 양쪽 각각 20여 명이다. 2006년 상반기에는 간행될 것이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찬부 양론 등 다양하겠지만, 한일의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끈질기게 대화를 나눠온 그들의 자세만큼은 높게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한일 양국의 카톨릭교회에서도 역사대화를 거듭해 왔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의 자세를 한일의 역사인식에도 살려보자는 취지였다. 그 주지에 따라 2004년에 "젊은이에게 알리고 싶은 한국의 역사-공동의 역사인식을 향해"가 양국에서 출판되었다.

(5) 역사대화의 논점

역사대화에서 논의된 화제는 세세한 사실의 확인으로부터 세계사의 관점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었다. 그 가운데에서 한일관계사의 파악에 관련된 몇 개의 논점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사를 어떻게 상대화해서 파악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보통 자국중심주의가 강하다고 일컬어진다. 역사대화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자주 화제가 되었다.

둘째,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것은 첫째 물음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역사대화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일본측은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내셔널리즘의 색채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내셔널리즘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식민지의 경험과 남북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는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어느 정도 내셔널리즘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한 내셔널리즘의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아직도 내셔널리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국제화세계화가 진행하는 앞으로의 시대에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는

것 같은 역사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셋째, 한일 사이에 국가의 테두리를 넘은 역사인식,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 등의 넓은 테두리에서의 역사인식의 설정이 가능한가? 즉 한일관계사의 관점을 둘러싼 심한 공방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서 세계사 속의 한일관계사, 혹은 동북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를 구상하면 어떻겠는가를 논의했다. 세계사와 자국사의 교육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양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완충의 역사무대로서 東北아시아史를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넷째, 청일전쟁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을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일본측은 그 사이의 수많은 전쟁은 각각 다른 이유와 사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지만, 한국측은 그것들을 일관된 침략전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측에서는 만주사변 이후를 15년 전쟁이라고 호칭할 수 있지만, 한국측은 청일전쟁 이후를 일괄해서 50년 전쟁이라고 불러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일본 근대사의 근본적 성격을 묻는 재미있는 논의이었다.

다섯째,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형성된 식민지사관적 한국사인식이 완전히 불식된 것인가? 일본측은 이 물음 자체를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한국측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아직도 그 뉘앙스가 남아있다고 본다.

여섯째, 한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역사교육의 본연의 자세는 무엇인가? 양측은 자국사중심주의와 편협한 내셔널리즘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일곱째, 한일 공통의 역사교재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대화의 처음 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대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 쪽으로 변했다. 지금은 공통교재를 실제로 만들었거나, 만드는 도중에 있는 사례가 몇 개나 존재한다. 한일의 역사대화가 이렇게 빠르게 결실을 맺어가는 것은 놀라우면서도 경사스러운 일이다.

(6) 상호이해의 진전

한국과 일본의 역사대화는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양면에서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역사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엄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관련된 성과만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한일의 역사교육의 구조와 역사교과서의 실태에 관한 이해를 증진했다. 역사대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서 그다지 모르고, 안다고 해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역사대화의 신속한 진전과 논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대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상대방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논의도 능률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한일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 또는 학생 사이의 상호 신뢰감을 형성했다. 보통 싸움은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고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되풀이되는 대화를 통해 참가자 끼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 믿게 된 것은 앞으로 한일의 역사 갈등을 풀어가는 데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셋째, 역사대화의 경과가 서적과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그 중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를 깊게 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반발을 초래한 면도 있다. "자유주의사관"이라든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움직임이 예일 것이다

넷째, 한일관계사에 관한 교과서 서술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양국에서 역사대화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교과서의 집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국의 역사연구의 동향과 역사교육의 방향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의 처지에서 그것을 자신의 교과서 집필에 살렸다. 그 밖의 집필자도 서적과 매스컴을 통해서 역사대화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교과서에 반영시킨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역사의 공동연구 또는 대화의 노하우(know-how)를 축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언동이 상대방을 성나게 만들어 정작 중요한 이야기까지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다. 쓸 데 없는 대립을 피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신속하게 옮겨가기 위해서는 역시 대화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역사대화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것을 몸에 익힌 것은 앞으로 역사대화를 추진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여섯째, 한일의 역사대화가 유럽 등에도 알려져, 한국과 일본이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기도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역사대화가 유럽에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한일 사이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정부끼리가 직접 부딪치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기 쉽다. 민간수준에서의 역사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이 중요하다. 역사대화를 통해서 공통교재의 개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단히 소중한 성과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면 역사 갈등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5. 한일의 역사대화와 역사인식의 심화를 위해서

(1) 역사대화의 바람직한 추진 방법은?

한국과 일본이 20년 이상에 걸치는 역사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역사대화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라는 점을 이해한다. 사람들은 보통 교제기간이 길면 길수록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 역사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단숨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대화는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으로 많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점을 전제

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시간을 들여서 정중하게 주장한다.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인식이 조금씩 싹트기도 한다.

둘째, 강한 자국중심주의 또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역사관을 내세우는 것에서 탈피할 것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이미 격렬하게 서로 부딪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지배,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저항과 반발이 그 전형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대화에서는 아직도 내셔널리즘이 부각되기 쉽다. 내셔널리즘을 학문적으로 서로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세워 대화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난처한 일이다. 우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후 신중하게 내셔널리즘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셋째, 상대방의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성과를 서로 존중하면서, 그것을 비판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오해는 무지로부터 생기고, 결국은 반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역사대화를 통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 오해와 반감을 그 만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 참가자는 역사대화를 학습의 기회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첫 단계부터 역사인식의 공유를 목표로 삼으면 대화가 딱딱해진다. 처음에는 서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테마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시도를 통해서 역사지식의 공유가 생긴다.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식의 공유는 역사인식의 폭을 좁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역사대화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서로 논의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노하우를 개발한다. 역사대화의 진행 방법은 참가자의 개성, 대화의 목적 등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대화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흡수하여 자신들에게 적절한 대화의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역사대화에서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민감한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대화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피곤한 일이다. 게다가, 대화의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논문을 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다. 실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또 역사대화에서의 활동이 자신의 학문적 업적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과의 대화에 관련된 일을 게으름을 피우면서 뭉개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과의 역사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인 끼리의 대화보다 2배 3배 성실한 자세로 대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상대의 신뢰를 얻는 왕도이다.

일곱째, 역사대화의 채널을 확대하고 대화의 주제를 다양화한다. 과장에 말하면 역사인식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대화가 나라를 대표할 수는 없다. 역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원에서 여러 화제의 역사대화를 주고받는 게 좋다. 그러한 시도 속에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타이프의 역사대화가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덟째, 역사대화의 진행 상태와 성과를 정부·매스컴·출판물 등을 통해서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민과 외국인에게 역사 갈등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국민 일반은 보통 역사문제는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풀뿌리끼리의 교제에서도 역사문제가 화제가 되는 일은 많고, 나라끼리의 역사 갈등도 결국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역사대화의 다양한 경과와

성과를 정부와 국민의 역사인식 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는 것은 나라끼리의 직접적인 싸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한일의 역사대화를 널리 알려서, 양국이 대화로써 역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대화는 유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역사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2)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한 역사인식을 심화시키자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화는 단순히 과거의 세세한 사실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역사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역사관계에 대해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200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길고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에도 양국은 인간·상품·자본·정보가 가장 많이 왕래하는 사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오해·갈등·불신이 많을 지도 모른다. 양국은 앞으로도 아무리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해가는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이웃 나라는 이사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사이에 항상 붙어 다니는 역사의 그림자를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국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데 언제나 장해가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멍에이기 때문이다. 굳이 한국과 일본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국제화·세계화가 더욱 진행되는 21세기에는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사이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과 일본이 참된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려 한다면, 양국 국민이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지향하는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대화야말로 양국에 항상 붙어 다니는 역사의 그림자를 제거하고 공생공영의 역사인식을 지향하는 오디세이(Odysseia)인 것이다.

<이 글은 鄭在貞, "韓日につきまとう歴史の影とその克服のための試み"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6.1)를 번역하여 약간 수정한 것이다>

<참고 문헌>

比較史比較歴史教育研究会, "自国史と世界史−歴史教育の国際化をもとめて" (未来社, 1985)などの一連の書籍

日韓相互理解研究会, "日韓相互理解アンケート調査集計結果報告書" (1992)

日韓歴史教科書研究会, "教科書を日韓協力で考える" (大月書店, 1993)

李元淳, "韓国から見た日本の歴史教育" (青木書店, 1994)

中村 哲, "歴史はどう教えられているか" (日本放送出版協会, 1995)

君島和彦, "教科書の思想−日本と韓国の近現代史" (すずさわ書店, 1996)

坂井俊樹, "韓国朝鮮と近現代史教育" (大月書店, 1997)

藤沢法映, "韓国との対話" (大月書店, 1997)

정재정, "한국의 논리 −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일본인식" (현음사, 1998)

정재정, "일본의 논리 −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 (현음사, 1998)

鄭在貞, "韓国と日本−歴史教育の思想" (すずさわ書店, 199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 한일 역사교과서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 (도서출판 오름, 1998)

鄭在貞, "歴史教科書問題と韓日協力" (第9次韓日フォーラム、2001.8)

鄭在貞, "韓国人の日本認識−その歴史的進展と課題" "東北アジア研究"第５号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01)

石渡延男, 鄭在貞共同編集、 "韓国発 日本の歴史教科書への批判と提言" (桐書房, 2001)

鄭在貞, "問われる歴史教科書, 広がる歴史の対話"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0(2002.10)

鄭在貞, "広がる対話, 深まる議論" "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対話" (大月書店, 2004.11)

<요약>

한국과 일본이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새로 갈등을 빚은 지도 어언 1년이 지났다. 그 동안에도 한일 사이의 민간교류는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정부레벨의 대결자세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두 정부가 역사인식의 골을 그 만큼 깊고 넓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양국이 이웃 나라로서 국제화세계화가 지구 규모로 확산되는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레벨은 물론 민간레벨에서도 역사대화를 끈질기게 나누어갈 필요가 있다. 역사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역사인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의 역사대화는 전문가끼리의 역사연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와 교육자를 비롯하여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나 역사교과서를 화제로 삼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흔히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의 기본교재이고, 역사교육은 그 나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일의 역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역사대화, 특히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를 화제로 삼는 역사대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제안한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화는 단순히 과거의 세세한 사실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작업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나름대로 역사대화를 나눠왔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오늘날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교류를 증대해온 배경에는 이들의 공로가 적지 않게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일의 역사대화는 양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의 방향으로 바꾸어 두 나라 국민이 공생공영의 역사인식을 향해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오디세이(Odysseia)라고 할 수 있다.

지정토론

김 유 경(경북대)

정재정 교수님의 논문은 지난 1년 사이에 새로이 격화된 한일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여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한일 간의 역사대화를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교수님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을 합리적인 대화로 해소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식인, 교사, 학생, 일반 시민들이 양국에 생각보다 광범히 존재하고, 또 이들이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끈질기게 노력해 왔슴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교수님의 보고는 <21세기를 미래지향을 위한 한일관계의 재조명>이라는 오늘 심포지움의 대주제를 매우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과거의 인식을 둘러싼 갈등마저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유럽의 역사대화를 검토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정선생님의 논고를 통해 한-일 간에도 유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소상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선생님의 논고를 읽고 선생께서 개진하신 중요한 논점을 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한-일 양국의 관계는 일반 시민사회의 수준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국교정상화이래 강화되었던 경제, 무역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양국 국민이 진정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방면에서의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양국국민의 경험을 정리하는 방식 – 저는 이것을 역사, 역사인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이 양국 시민들 상호간에 증대하는 우호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양국의 정치가 이 갈등의 증폭에 가세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의 신사참배, 일본문부과학성의 <새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일부 고위 정치인들의 세련되지 못한 언사 등등...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나치게 직접적인 간여 역시 사태를 완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킨 감이 있었습니다.

선생의 입론에 의하면 한-일 양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의 차이는 무엇보다 양국의 2세 국민, 미래 양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학습하는 자료,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1982년 1차 한일 역사교과서 파동이 발발한 이래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사안입니다. 정교수께서는 이 사태이래 지난 20여년 동안 한일 양국에서 진전되어온 역사교과서의 개선성과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정교수께서는 양국의 역사인식태도, 교과서 편찬방식과 자세에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 역사교과서의 지나친 자민족 중심주의적 역사파악과 서술, 양국의 교과서 제도에서 정도의 다소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개선노력은 이 점을 완화시키는 노력이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대에 들어 일본의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새 역사교과서》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20년간의 개선노력을 수포로 돌릴 정도의 후퇴를 가져오고, 한일국민간의 감정대립을 새로이 격화시켰습니다. 이 교과서의 출현으로 역사분쟁에 정부당국마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까지 초래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역사인식을 둘러싼 양국(정부간)의 마찰도 현실적으로 진전된 양국 국민, 시민사회의 교류 — "한류 붐"과 "닛폰 필 — 을 억누르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는 양국의 시민사회가 양국의 정치인, 정부당국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성숙했음을 반증하는 예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교수님의 논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한일 양국의 연구자, 연구단체, 지식인 사이에 그늘에서 진행되어온 역사대화의 경과와 성과를 보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미 20여년 이상을 민간수준에서 꾸준한 역사대화가 진행되어 온 점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용케도 정치적으로까지 비화된 갈등의 이면에서도 끊기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역사대화에는 한일양국 사이를 넘어서 북한, 중국이 참여하여 점점 국제화되었습니다. 나아가 일종의 옵저버가 되겠습니다만, 유럽, 미국의 연구자, 관련 연구단체마저 이 대화에 참여하여 더욱 광범하게 국제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이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교수께서 성과가 많았고, 진정으로 상호이해증진에 기여한 역사대화는 민간연구단체, 연구자, 교육자 중심의 대화였슴을 강조하면서, 기대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2002년 5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셨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위원회가 양국의 역사갈등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상호이해노력과 국가가 주도한 “외교적 활동(?)”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정교수께서는 민간수준에서 전개된 대화의 많은 성과를 풍부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과 논점이 풍부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해서, 유감스럽게도 지면의 제한으로 충분히 소개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정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비교적 성공적인 민간수준의 역사대화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큰 문제, 즉 역사를 보는 패러다임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자국사의 상대화 문제, 양국의 역사교육, 심지어 역사학에 까지 깊게 드리워져 있는 강력한 내셔널리즘의 문제, 동북아, 세계사의 문맥 속에 양국사를 위치짓는 문제, 소위 식민사관과 황국사관의 문제 등등...

이상의 논점정리에 이어서 토론자로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 임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정교수님께서는 민간수준의 역사대화가 “한일공동역사연구위원회”식의 접촉보다 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정교수께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본과의 역사대화를 실천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한일간의 역사갈등, 역사교과서 분쟁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 및 실천적 활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교수께서는 한일공동역사연구위원회의 성과가 부진하고, 널리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배울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민간수준의 역사대화에서 정교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의견의 접근을 보기 어려운 큰 패러다임 상의 문제를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의미있는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하나 좀 더 소상하게 소개해 주실 수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대화가 이런 큰 패러다임을 암암리에 전제한 위에서 진행되겠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실을 맺는 방법상의 다른 고려는 없겠는지요? 이 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한 매스컴 편집간부 세미나 40년의 교훈

– 下川正晴(한국외대 객원교수, 마이니치신문 전 논설위원)

지정토론 – 황영식(한국일보 논설위원)

프 로 필

下川正晴(한국외대 객원교수, 마이니치신문 전 논설위원)

오사카(大阪) 대학법학부졸, 릿교대학 대학원문학연구과 박사과정 전기 수료.
석사(비교 문명론)
마이니찌신문(每日新聞) 서울, 방콕 지국장, 논설위원, 편집 위원등을 역임.
한국 외국어대학객원교수.
사단 법인 「한일 사회문화 포럼」 이사.

일한 매스컴 편집간부 세미나 40년의 교훈

下川正晴(한국외대 객원교수, 마이니치신문 전 논설위원)

＜要旨＞

2005年春、日韓間に起きた「竹島(独島)」「教科書」「靖国参拝」を中心とする一連の紛糾は、国交正常化から40年を記念する「日韓友情の年」を暗転させた。今回の日韓紛争は「政治主導」であったことが特徴である。盧武鉉大統領と小泉純一郎首相の相互に配慮を欠ける外交姿勢が、混迷に拍車をかけた。日刊のメディアはこの事態に冷静に対処しただろうか？答えは「ノー」というしかない。筆者は今こそ、日韓のメディアを相互検証する「日韓メディア・ウオッチ」の設立が緊要であると提言したい。そのためには、日本新聞協会と韓国新聞放送編集人協会が1966年以来40年にわたって共催してきた「日韓編集幹部セミナー」の成果と問題点を検証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もっとも問題なのは、このセミナーの討議内容が、韓国側では冊子になって公開されているのに、日本側では公開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１９８０年代と比べると、日韓を取り巻く諸状況には①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の急成長②南北首脳会談の実現（００年６月１５日）など南北関係の改善③日韓間における歴史認識問題の深刻化④「韓流」などによる日韓国民交流の活発化、など大きな環境変化が見られる。このような変化がマスメディア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さらに日韓両国民の相互認識にどう関係があるのか。こういった問題が改めて問われる時点に来ているのではないか。日韓の相互報道を日常不断にチェックする「日韓メディア・ウオッチ」設立の必要がある。マスメディア関係者の問題提起―反論―再反論を通じて、日韓両国が双方で派生する紛争を上手に「管理」する道も開け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筆者が提唱している常設「日韓メディア・ウオッチ」の意義は、そこにある。

１、はじめに

日本と韓国は昨年、１９６５年の国交正常化から４０年目の節目を迎え、政府間では「日韓友情の年」として各種行事が準備されていた。しかし、島根県議会の「竹島の日」条例、歴史教科書問題、小泉純一郎首相の靖国神社参拝に韓国側が大きく反発したことで、日韓関係は急速に冷却化した。今回の日韓紛争は、とりわけ盧武鉉大統領の「３・１節」演説をはじめとした強硬発言、小泉純一郎首相の靖国参拝への固執が事態を悪化させたのが特徴である。このような政治状況は、地方自治体同士の交流にも悪影響を与え、韓国の自治体側から抗議文が送られたり、相互交流が中断したりした。その後、日本側の「韓流ブーム」はやや衰えを見せ、「マンガ嫌韓流」がベストセラーになるなど、韓国の対日言説に対する批判も日本国内で顕在化してきた。

筆者は毎日新聞ソウル特派員、韓国担当論説委員を務めた経験などから、日韓両国民の相互認識（文化摩擦）に与えるマス・メディアの影響について、研究や発表を行ってきた。「メディア・フレーム」という学術用語がある。メディア表現上の決まりきったものの見方、固定概念、ステレオ・タイプなどを指す言葉である。「ジャーナリストたちはメディア・フレームに準拠することによって、大量の情報を迅速かつ手際よく処理し、ニュースとしてパッケージ化することができる」[1]。「メディア・フレームは特に国際報道について指摘されたものではないが、国際報道においては国内報道の場合よりも、もっと顕著に表れる傾向がある。韓国のマス・メディアの日本報道などが、その例である。日本のマス・メディアによる韓国報道にも一般的なメディア・フレームによって説明できる部分がある。これは現在よりも、韓国の本格的民主化以前の時代に顕著であった」[2]

これらの弊害は改善されたのだろうか？　昨年の日韓報道を検討した結果からすれば、「いまだ道遠し」の感は否めない。いまこそ、日韓の相互報道を総合的に調査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筆者がソウル特派員を務めた１９８０、９０年代と比べて①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の急成長②南北首脳会談の実現など南北関係の改善③日韓間における歴史認識問題の深刻化④「韓流」などによる日韓国民交流の活発化――など大きな環境の変化が見られる。このような変化がマス・メディア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さらに日韓両国民の相互認識にどう関係があるのか。これを調べることは、日韓関係の改善にも少なからず寄与するはずだ。筆者が日韓の相互報道を日常不断にチェックする「日韓メディア・ウオッチ」の設立を提言している由縁でもある。

従来、マス・メディアの日韓相互検証の場が、存在しなかったわけではない。筆者が理事として参加している社団法人「韓日社会文化フォーラム」は、ＮＰＯ（非営利団体）時代の数年前から「韓日言論人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た昨年からは毎月のように「マスメディアフォーラム」を開き日韓関係とマス・メディアの問題について考えてきた。さらに労働組合レベルでも、日本新聞労連（もしくは日本マスコミ文化情報労組会議）と韓国言論労連の間でも、１９９０年代中盤以来、年に１回ほどの交流研究集会が行われてきた。日韓外務省が行ってきた記者交流事業もある。

日韓の言論交流では、さらに長い歴史を持つ催しがある。日本新聞協会と韓国新聞放送編集人協会が主催してきた「日韓（韓日）編集幹部セミナー」である。これは１９６６年１１月７日に東京で行われたのを起点として、韓国と日本を往復しながら、１年に１度のペース（１年に２回開かれたこともある）で続けられてきた。昨年１０月２６日には、「韓日関係の再整備方向と言論の役割」をテーマに、第４２回セミナーがソウルで開催された。しかし、きわめて閉鎖的なセミナーであり、ごく限られたマスコミ関係者だけに内容が知らされているに過ぎない。その歴史と規模からみて、このセミナーが等閑視されている現

1　岡田直之「事件とニュースの間――ニュースの政治学」中野収・早川善治郎編『マスコミが事件をつくる―情報イベントの時代』（有斐閣、1981）36ページ。

2　伊藤陽一「ニュース報道の国際流通に関する理論と実証」（慶應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紀要「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No.50、2000年）51ページ。

状は、日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増進にとって大きな損失である。

本論文では、日韓編集幹部セミナー４０年の歩みを振り返り、そこから得られる教訓を整理するとともに、日韓マス・メディアの相互検証に当たっての問題点を考察したい。本論文は、第１章は「２００５年の日韓関係報道」、第２章は「日韓編集幹部セミナーの歴史と問題点」、第３章は「２００４年セミナーから」、第４章は「２００５年セミナーから」、第５章「日韓マス・メディア相互検証の方向性」の構成になっている[3]。

日韓双方では、「日韓友情の年」が「日韓苦痛の年」に転じた２００５年の苦い教訓を生かすべく、「日韓交流５カ年計画」（ジャパン・ファウンデーション）などの策定が進められている。この中には日韓ジャーナリストの交流など「新世紀パートナーシップ」（仮称）などの構想もある。これは日韓両国の言論、政治、文化芸術など様々な分野を担う中堅指導者・専門家の交流の強化を図ろうというもので、主に３０～４０歳台の交流と対話促進を目指している。日韓メディアによる内実のある相互批判を実現するために、本報告が多くの関係者の参考に供さ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

２、２００５年の日韓関係報道

２００５年春、日韓間に起きた「竹島（独島）」「教科書」「靖国参拝」を中心とする一連の紛糾は、「サッカーW杯共催」「韓流」によって好転しつつあった日韓関係に冷水を浴びせ、日韓政府間の関係が緊張する局面をもたらした。ここでは、２００５年２月から６月までの日韓マスコミ（主に新聞）による報道内容を検証し、問題点を指摘するとともに、考慮すべき点について若干の提言を行いたい。本報告は包括的なものではなく、断片的かつ実務的な内容にとどまる 。筆者はこの期間ソウルに在住していたため、分析対象は主に韓国側のメディアである。あわせてご容赦願いたい。

＜政治主導の「日韓紛争」＞

昨年２月中旬以降の経緯を振り返ると、明確になることがある。それは、今回の「日韓紛争」は盧武鉉大統領、小泉純一郎首相など日韓首脳の「政治的対応」「感情的対応」により拡大したということだ。盧大統領は３月２７日、青瓦台担当記者と一緒にソウル北郊の北漢山に登った。その際、大統領は一連の対日強硬姿勢について「日本国民の関心を引き・・・」と釈明した。つまり、意図的に強く出た、という言い回しで、自らの「積極性」を自認しているのだ。しかし、これは逆に日本側の反発を招き、積極策は裏目に出た。小泉首相も「韓国内向けの発言でしょうね」と述べ、青瓦台側をいたく刺激した。一連の韓国紙の報道は、「３・１節演説」「国民への文」などの起草が大統領の独断専行で行われ、韓国外務省が蚊帳の外に置かれたことを実証的に報道した。これらは韓国政府の内情理解に大いに役立った[4]。

---

[3] 「２」は韓国外国語大学情報言論研究所主催の２００５年度秋季学術セミナー（２００５年１１月１８日）での発表論文を再構成した。「４」は日本新聞協会「新聞研究」（２００４年１２月号）所載の報告を大幅に加筆修正した。

[4] ３月２４日朝鮮日報「外交部も知らないうちに決められる外交政策」。３月２日の中央日報１面には「“賠償”という単語は当初、国家安全保障会議（ＮＳＣ）事務局、青瓦台市民社会首席秘書官室が（大統領に）届けた資料には入って

「(盧大統領の) 姿勢が変わり始めたのは、２月２３日。島根県議会で『竹島の日』条例案が提出され、ほぼ同時刻に高野紀元・駐韓大使がソウルでの記者会見で『竹島は日本の領土』と明言した日だ。青瓦台関係者は、伏し目がちに考え込む大統領の姿を覚えている」。朝日新聞の検証記事「盧大統領はなぜ怒った」（４月２日朝刊）は、この間の大統領の動向をフォーローしたものだが、間違いがある。実際には、青瓦台による「対日政策」の見直しは「高野発言」以前から始まっていたからだ。

筆者が確認しているところによると、２月上旬から青瓦台に日本研究者が次々に呼び出されている。「近々、大統領が画期的な対日外交宣言を発表する」「対日新宣言は３・１節の大統領演説で行われるのではないか」。日本研究者の周辺では当時からそんな観測が有力だった。だから盧大統領の「唐突な演説」（３月２日・朝日新聞社説）は、事前に準備された計画性のあるものだった。高野発言は青瓦台の強硬トーンを強めるのに役立っ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国内用の演説」「補欠選挙目当て」という分析は、半分しか当たっていない。盧大統領はここにきて、なぜ「対日強硬」路線を顕在化させたのか？　この点に関する分析は、日韓メディアともに弱かったのでないかと思われる。のちに顕在化する盧武鉉政権の「東アジアの均衡者論」との関連も、十分に検討されるべきであろう。

一方、「竹島の日」条例を巡る日本側の真意は何だったのか？　ハンギョレ社説（２月２５日）のように「高野大使の発言は、日本政府次元の意図的な挑発だ」「竹島の日条例は、わが領土を侵略したのと差異がない」と断定する根拠が果たして何だったのかは、いまもって明確でない[5]。

＜「高野妄言」の真相＞

筆者は２００５年２月１５日から韓国での生活を始めた。ソウルには特派員時代（１９８９－１９９４）に５年間暮らした。１０年ぶりのソウルは、住みやすい都市に変貌していた。「竹島の日」条例制定を巡る日韓間の「異変」がエスカレートし始めたのは、着任約１週間後の２３日だった。高野紀元・駐韓日本大使（当時）は２月２３日午後、韓国言論会館内にある外信記者クラブで質問に答えて、「竹島は歴史的に法的にも日本の領土だ」と述べた。これが、夕刻のテレビニュースで「日本大使が妄言」と報じられた。男性アナは興奮した口調だった。韓国各紙の社説はその後、一斉に高野発言を糾弾した。「朝鮮日報」の社説は「高野大使は駐在国の首都の真ん中で、外交的な無礼を働いた」（２５日）と噛み付いた。「日韓友情の年」の外交紛争は、こうして幕を開けた。

まず、高野大使発言の経緯を確認したい。筆者の取材によれば、「真相」は以下の通りで

いなかった。盧武鉉大統領が担当秘書官に直接、口述して挿入した部分だ」というニュース分析が掲載されていた。

5　中央日報の金永熙大記者は２００５年３月３１日のコラム「逆行する独島対策」で、「第１に、島根県には０１年に日本政府の検閲を通過した扶桑社の歴史教科書を採択している学校が１校もない。従って独島と歴史教科書を同レベルで論じるのは戦略ミスだ。第２に、島根県議会が竹島の日を制定した背景の１つは、独島問題に余りにも無関心だった県民の関心を集めるためだった。 地方自治体と市民社会が島根県との交流を中断していることは、愚にも付かない」と指摘した。「日本政府が島根県議会の竹島の日制定を支持・ほう助したという主張は、東京と島根の双方で事実とかなり食い違っている」「日本政府は、島根県が竹島の日のようなものを制定しても、韓日関係はさほど悪化しないだろうと楽観視する失政を犯した」。同記者は結論として、「たとえ大統領が外交戦争と叫ぼうとも、地方自治体と市民社会は日本と草の根レベルの交流を再開・拡大することが、独島と歴史を守り、国を愛する道だ」と書いた。

ある。駐韓日本大使の外信会見は一年に一回程度が慣例だ。今年は事前に「旧正月休暇が明けてから」という合意が大使館、外信記者クラブの間でできていた。会見当日、内信記者は会場に誰もいなかった。入り口で厳重チェックされていたためだ。大使が３０分ほど基調発言した後、質疑に移った。「妄言」を引き出した質問は、質疑の途中、３、４人目に出た。質問したのは、テレビ朝日ソウル支局の韓国人記者である。同僚の日本人記者（韓国語が達者でない）に促され、「島根県議会が『竹島の日』条例案を上程し、慶尚北道が強く反発している。どう思うか」と聞いた。高野大使が英語で答えた。①「そういう問題が起きているのは知っている」②「竹島は歴史的にも法的にも日本の領土である」③「この問題が日韓関係全般に悪影響を与えないように望む」と述べた。この発言が、ロイターなどの外国通信社電で流れた（外信には韓国人スタッフが多い）。現場にいなかった韓国の聯合ニュースは外電報道に驚き、日本側通信社の協力を得て、大使発言を録音テープで確認した。夕刻のテレビでは、聯合ニュースの配信記事（ロイター、聯合の記事内容については未確認）のうち②の部分が声高に放送された。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も聯合ニュースを引用報道して糾弾した。政府広報の観点から考えると、高野大使は外交官としては拙劣だったというしかない。質問は「竹島（独島）の帰属」を質したものではないからだ。外交官としては①③の答弁で十分である。②については「日本政府の立場はかねてから明らかにしている通りである」とすればよい。慎重居士で鳴る高野大使（外務省では報道担当だった経歴もある）が、韓国政府に対する「意図的な挑発発言」を行ったとは考えにくい。答弁上のミスである。なぜか？　日本語ではなく英語で答えたせいだ、という観測もある。また、大使館側も大使発言について事後広報をまったく行わなかった。この点も非常に問題がある。いずれにしろ、大使発言は青瓦台側の感情的な対応を呼び起こした。その後の日韓双方の政府対応は、日韓外交に大きな損失を与えたというしかない。

次に、高野発言を報道した韓国側メディアには、取材報道上の問題点が指摘できる。①②③の発言のうち、②だけをセンセーショナルに伝えたことだ。駐韓日本大使館側によると、「韓国メディアから大使の発言内容について問い合わせは１件もなかった」という。現場取材できなかった場合、当事者に確認取材をするのは当然の行為だ。それすらも行われなかったとすれば、取材報道の基本を放棄しているというしかない。確認取材していれば、発言の真意が③にあったことを確認できたはずだ。朝鮮日報政治部記者の証言によると、同紙は２３日夕刻のテレビ報道を受けて、日本の提携社支局に問い合わせの電話を入れるなどして、簡単なストレート記事を作成した。「翌日の朝刊はファクトだけの報道だった」が、翌々日の社説は前述のように、一気に日本批判のボルテージが上がった。日本外交筋によると、韓国の外務通商部も発言当日は「様子見」の姿勢だった。しかし、テレビ報道で発言を知った韓国民から糾弾電話が外交部に相次ぎ、韓国メディアの報道を見極めると、２４日午前には駐韓日本公使を呼び出し、「厳重抗議」した。外信報道→国内通信社→テレビ→総メディアの報道→外務通商部に影響→激烈な新聞社説→国民世論に影響→外交・報道に再影響、という具合に事態はエスカレートしていった。感情的なマスコミ報道と韓国

政府の対応が相乗作用を起こし、事態の悪化をきたす。この旧態依然たる構造は、１０年前とさほど変化がない。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が加わったことで、さらに悪くなったと言ってもいい。欠けていたのは、事態の真相に迫る取材である。少なくとも詳細な事後検証の記事があれば、双方の誤解解消に効果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韓国紙の報道を読み直して、盧武鉉政権がバックアップする「ハンギョレ」新聞の社説（２月２５日）が韓国政府の「対日新ドクトリン」（３月１７日発表）などと、文言が驚くほど一致するのに気がついた。①「高野大使の発言は、日本政府次元の意図的な挑発だ」②「竹島の日条例は、わが領土を侵略したのと差異がない」③「日本は露骨な再武装と右傾化を進めている」④「日本を簡単に信用する韓国人は誰もいない」⑤「日本の厚顔無恥な行為を、これ以上許せない」⑥「場合によっては、韓日関係を全面的に再検討する」。特定新聞の論調とその後の政府見解が、これほど合致する光景を少なくとも１０年前は見たことがない。「ハンギョレ」社説には、次のようなくだりもある。「釜山市や慶尚南道が対馬を領土に編入すれば韓国領になるとも知れない」。周知の通り、馬山市議会は３月１８日、「対馬の日」条例を可決する。これらの“連携”行動は、韓国メディアに横溢する「民族主義」のなせる技と言うべきだろうか。

＜韓国紙の「対日観」＞

２００５年春の「日韓紛争」に登場した日韓両紙の言説の中から、代表的な例を検討してみたい。まず、最初のサンプルとして取り上げるのは、「大韓民国の尊厳を日本の挑発から守れ」。韓国の最大手紙、朝鮮日報の３月１２日付け社説である（日本語訳は同紙日本語版インターネットから引用）。

「日本の右翼[6]団体『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が支援する扶桑社の中学歴史教科書２００５年改訂版が『朝鮮の近代化を援助した日本』という別途の章を新設し、日帝の植民地支配を露骨に美化する内容を盛り込んで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こ数年間、日本は明らかに異常な方向に進んでいる。韓国関連では異常兆候がさらに深刻になっている。島根県議会は独島が自らの領土に編入された１９０５年から１００周年を迎え、『独島の日』条例制定を強行した。高野駐韓日本大使は、ソウルの真ん中で開かれた外国メディアとの会見で『竹島（独島）は日本領土』と言い切った。そして今回の教科書歪曲[7]に至るまで、日本の動きは露骨で計算された対韓挑発というほかない」「日本は米国に対して公式的にも、また教科書の記述を通じても『（日本の）太平洋戦争は正当だった』という主張を提起したことがない。一方、日本は植民地支配、強制動員、虐殺などで被害を与えた周辺国には、事実歪曲を繰り返すことによって過去の傷に塩を塗ってきた。日本の戦後対外関係史におけるこうした『卑屈』と『ごう慢』という両面が、経済力を土台にし国連安保理をはじめ

6 韓国紙の「右翼」という表記は、日本語では「右派」のニュアンスに近い場合が少なくない。日本人特派員が日本語訳する際に注意すべき大きな留意点の一つだが、韓国語「右翼」をそのまま、「右翼」と翻訳している報道例が多い。

7 ４月１８日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は「歴史教科書が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確認のため有用な道具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のは、韓国、中国、日本に共通している。（中略）日本の教科書は韓国・中国の教科書よりバランスが取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報じた（朝鮮日報日本語版ネットから）という。

とする世界政治の舞台に上がろうとする日本の政治的抱負を挫折させる主な原因だった」

島根県議会、駐韓日本大使、新しい歴史教科書という、位相の違う日本側の動向を「計算された対韓挑発」と断定しているのが特徴だ。日本の対外関係史に「卑屈」と「ごう慢」の両面性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のは、従来から韓国紙によく見られた論調である。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に対する日本側の「国際法解釈」に関する無理解も指摘できる[8]。ちなみに、朝鮮日報編集主幹の姜天錫氏は常設コラム「姜天錫コラム」で、「韓国と日本がともに生きる方法」を書き、「この数日間の情勢の中で、浮かんできた言葉は『無謀と無知』という二つの言葉だ」と指摘した。同氏は１９８０年代後半、同紙の東京特派員を務めた。秀逸なのは次のくだりである。「この隣国同士が平和に生きていく方法はないのか。私の考えでは韓日両国が歴史に対する異見、歴史による不和をある程度我慢するほかにない。（中略）病気と仲良くなってこそ、病気を克服できるという言葉がある。それと同様にわれわれも両国間の不和に慣れるほかないのである」。きわめて優れた論評だが、前述の朝鮮日報社説と比較した場合、その対日批判の水準の落差に驚かされるのは、筆者ばかりではあるまい[9]。

＜日本マスコミの「対韓観」　＞

日本側の対韓論調には少し変化が見られ始めた。特に話題になったのが、朝日新聞の社説「日韓関係―大統領演説への戸惑い」（３月２日付け）である。盧武鉉大統領の「３・１節演説」を論評したもので、「演説には唐突感が否めない」と違和感を表明した。同社説は「（盧大統領が）『謝罪』を言い、『賠償』という言葉をいたずらに使うことには、日韓の将来を真剣に考える我々も戸惑う」と述べ、さらに同大統領の言及に関連して「植民地支配という歴史と北朝鮮による拉致は同じ次元の問題ではない。北朝鮮の対日非難に通ずるかのような物言いは、日韓関係にとって逆効果だ」と批判した。朝日はすでに、２月２７日付け社説で「盧政権―大局を見据えてこそ」で、「（竹島問題は）もともと両国の主張が違うのだから、自治体の条例ぐらいで大騒ぎすることはあるまい」「（日米韓は）互いの立場を理解し、足並みを乱さないことが大切だ」と盧政権に注文をつけていた。

朝日新聞の論説主幹、若宮啓文氏はソウル留学歴のある「知韓派」である。また、同紙のコリア担当論説委員は元ソウル支局長だ。生え抜きのコリアウォッチャーが同紙の論説委員になったのは、初めてである。従来は中国問題担当者らがコリア関連論説を書いていた。朝日の論調の変化は、このような執筆人のシフトと関係があるだろう。 朝日新聞の市川速水ソウル支局長は、筆者が運営委員を務めるNPO韓日社会文化フォーラム主催の「第3回韓日社会文化フォーラム」（2005年10月14、15日、釜山）で、韓国メディアに頻繁に登場する「妄言」という言葉が、主に対日関係のみに用いられる表現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上で、「妄言の中には単なる“日本の立場”の表明も数多く含まれる。（中略）韓国とは異なる主張を、感情的な表現である『妄言』のレッテルを張り続ける限り、

8 「中央日報」のムン・チャングク論説主幹は、２００５年３月８日付けのコラムで「日本に向かって毒づくほど（韓国にとって）簡単なことはない」と指摘した。

9 コラムの文脈からすると、日本側が「無謀」で、韓国側が「無知」という分析のようだが、筆者の目には「無謀と無知」は日韓双方に入り混じっているように思える。「共生とは？」。最近、流行の言葉の意味を聞かれて「共苦ってことよ」と答えた上野千鶴子・東京大教授（社会学）のセリフを思い出すコラムである。

日本側からの歩み寄りは生まれにくい」と指摘した[10]。

一方、「日韓紛争」をめぐる民間放送テレビの報道は、他のテーマをめぐる報道ぶりと同様、問題点が指摘される。最近のテレビニュースがワイドショー化し、センセーショナルなものが少なくない[11]。もっとも典型的な例として、ここではテレビ朝日６月２０日夕刻のニュースの特別レポート（約１８分）を検証したい。これはソウルでの日韓首脳会談にタイミングを合わせたものだ。「日本に核兵器を打ち込みたいくらいだ」「日本は海に沈んでほしいわ」。一部韓国民の極端な意見をあたかも韓国民全部がそうであるかのように紹介し、「日本人はソウルから帰れ、と言われる」という在韓日本人の声を伝えた。一部には適切なコメントもあるが、その報道構図は「韓国＝反日」のワンパターンである。この番組を見た日本人は「韓国なんて怖くて行けそうにもない」と誤解するに違いない。

＜親日論争に見る「言語空間の不自由」＞

昨年の「日韓紛争」は「親日」をめぐる韓国の言語空間の不自由さを改めて浮き彫りにした。単行本『殴り殺される覚悟で書いた１００年ぶりの親日宣言』を出版した歌手・趙英男氏は産経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内容（靖国に「参拝した」と表現）が問題にされ、集中砲火をあびた。ＫＢＳの番組司会を降板した。また、高麗大学名誉教授の韓昇助氏は月刊誌「正論」４月号に発表した原稿で、「日本の韓国支配は不幸中の幸い」と表現したことが問題になり、名誉教授職から退いた。さらに、産経新聞の黒田勝弘ソウル支局長（論説委員兼務）は韓国政府批判の論陣を張り、韓国のテレビ（ＥＢＳ、ＭＢＣ）に登場して持論を述べた。特にＭＢＣでの発言（「竹島は日本のもの、独島は韓国のもの」ほか）は、インターネット上などで激しく非難された。のちにハンギョレをはじめ韓国各紙は、黒田支局長の「大学講師問題」を摘発し、批判を加えた。同支局長が「教師活動」の許可を得ず西江大学で兼任教授として「日本事情」を教えていたことを暴露したもので、同支局長は入管当局から外国人登録法違反として罰金（８００万ウォン）を課せられた[12]。

さらに筆者の知るところによると、ＡＰＥＣの釜山開催を前にした昨年１１月８日、青

10　市川速水支局長は①日本が竹島の領有権を主張する論拠について報道した（韓国側の）例は、ほとんど皆無だった。ひごろ盧武鉉政権に批判的な朝鮮、中央、東亜の３紙がむしろ政府に近かった。②ソウルでの日韓首脳会談では、韓国側の希望で質疑応答なしという異例の事態になった。これに反発する韓国側メディアはみあたらなかった。③朝鮮日報９月７日付けのカール・カイザー米ハーバード大教授へインタビュー記事の見出しは、教授が「日本の過去の反省なしに東北アジア共同体は難しい」と語っているとしているが、本文中にそのくだりはない――など、報道実務者として韓国側報道への不満を述べた。

11　韓国のテレビ報道について韓国放送映像産業振興院のニュースウォッチチームは２００５年３月 29 日、島根県の「竹島の日」条例が通過する２日前の３月 14 日から２3 日まで、週末を除いた８日間、KBS、MBC、SBS の地上波放送３社と、日本の NHK の独島(竹島)関連報道を比較・分析した報告書を発表した。報告書によれば、報道件数で KBS が 75 件、NHK は３件という極端な対応が明らかになった。KBS は「熱い関心」と「積極的問題提起」を試みた反面、多様な領土紛争中の一部だと判断する日本の NHK は「消極的無視」と「反応の遅い当惑」を表した。KBS の場合、解説および分析記事の比重が相対的に高く、日本に批判的な論調が半分以上を占めた。しかし、NHK は独島(竹島)と関連した３件の報道が、みな中立的な論調を維持した。このような差異はインタビューにも反映され、KBS は日本を批判するインタビューが 17 件(36.2%)を占めた反面、NHK は韓国を理解するインタビューと中立あるいは傍観するインタビューが各々１件ずつだった。韓国放送局の中では KBS が最も大量かつ積極的に報道し、MBC は KBS と SBS に比べて、報道件数、時間ともに少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だが、MBC は刺激的映像と感情的語彙を最も多く使用していた。報告書は法的歴史的な次元で落ち着いて取り上げた韓国のテレビ報道は放送３社で 5%内外に過ぎなかったと指摘した。

12　日本側では産経・黒田勝弘支局長への評価は高い。０５年には「日本記者クラブ賞」「菊池寛賞」を受賞した。日韓間には「クロダ問題」があると言ってもよいほど評価のギャップがあるが、「西江大学」問題はケアレスミスに過ぎない。

瓦台では盧武鉉大統領とソウル駐在の外信支局長との懇談会が開かれたが、青瓦台側は黒田支局長を招請対象者からはずした。また一昨年末の「年末懇談会」にはいったん招請状を出しながら、直前になって「遠慮してほしい」と通告した。これら韓国政府の対応は「参与の政府」に似つかわしくない「排除の論理」である。「韓国新聞法」などに憂慮を強める日本言論界からの批判が強まることも予想される[13]。

３、日韓編集幹部セミナー４０年

この報告の冒頭で述べたように、日韓の言論交流としてもっとも長い歴史を持つのは、日本新聞協会と韓国新聞放送編集人協会が主催してきた「韓日編集幹部セミナー」である[14]。これは１９６６年１１月７日に東京で行われたのを起点として、韓国と日本を往復しながら、１年に１度のペース（１年に２回開かれたこともある）で続けられてきた。しかし、きわめて閉鎖的なセミナーであり、ごく限られたマスコミ関係者だけに内容が知らされているに過ぎない。その歴史と規模からみて、このセミナーが等閑視されている現状は、日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増進にとって大きな損失である。

その歴史を振り返り、問題点を考えてみたい。

韓国新聞放送編集人協会の事務局が作成した内部資料によると、日韓編集幹部セミナーが初めて開催されたのは、日韓条約締結の翌年にあたる１９６６年である。１１月７日、東京で開催されたと記録されているが、当日の議題や参加者は明らかでない。開催地は日本と韓国を交互に往来する形が取られたが、どういう事情からか、連続して同一国で開かれたこともある。６９年、７１年、７２年には年２回開かれたが、他はいずれも年１回のペースである。２００１年には開催されていない。これは同年、ＳＡＲＳ流行のため、ソウルでの開催が取りやめになったためだ。各開催の日程、場所、テーマは次の通りである。

回数	日程	場所	テーマ
１	６６・１１・７	東京	不詳
２	６７・９・２６	ソウル	政治と防衛問題
３	６８・６・２４	東京	金嬉老事件、朝鮮大学認可問題、北朝鮮ゲリラ部隊の青瓦台襲撃未遂事件、米情報収集船プエブロ号事件
４	６９・５・１４	ソウル	アジア地域における先進国の役割と後進国の立場、韓日経済交流とその問題点
５	６９・１１・４	福岡	アジアの安保と地域開発
６	７０・８・３１	大阪	新聞文化面製作者の立場から見た韓日交流
７	７０・１１・１３	ソウル	日本教育制度の変遷と展望、韓日両国の生活文化

[13] 韓国政府の言論政策の問題点について、筆者は２００５年１２月２日、日本記者クラブ（東京内幸町）で、新聞法・言論仲裁法を中心に講演した。その速記録が同クラブのホームページで公開されている。
http://www.jnpc.or.jp/cgi-bin/pb/pdf.php?id=191

[14] 日本側では「日韓編集セミナー」の呼称が一般的である。参加者が必ずしも「幹部」に限られない事情を反映していると見られる。

８　７１・９・２０　ソウル　国際報道と国益問題、韓日両国関係報道の再検討

９　７２・２・２１　仙台　不詳

１０　７２・１１・１５　ソウル　韓日両国の伝統文化と報道の問題、報道を通じて見る韓日文化交流の現況と展望

１１　７３・５・１４　名古屋　韓日両国間の文化の源流を訪ねて、文化をめぐる報道上の諸問題

１２　７４・７・２４　東京　韓日両国における青少年問題と報道

１３　７５・９・１０　ソウル　韓国人論、日本人論

１４　７６・７・２１　熊本　地域ならびに国際ニュースを巡る問題、記者教育ならびに訓練

１５　７７・６・８　ソウル　新聞紙上の問題点（読まれる紙面を作るための努力、編集部の現況と今後の方向、編集記者の養成問題）

１６　７８・５・２３　東京　最近の技術革新による新聞制作上の問題、韓日関係における報道上の問題点

１７　７９・５・１０　釜山　韓日交易増進と経済協力問題

１８　８０・１１・５　東京　１９８０年代の韓日関係――アジア時代における日本と韓国の役割

１９　８１・１０・２７　ソウル　韓日協力の改善と言論の役割

２０　８２・５・１０　東京　韓日両国新聞編集上の課題

２１　８３・１０・２５　ソウル　新聞編集上の諸問題

２２　８４・１０・２３　東京　社会面製作の新方向

２３　８５・１０・２７　ソウル　社会変化と社会面報道

２４　８６・１０・２８　東京　文化報道の問題点

２５　８７・１０・１９　ソウル　家庭面製作の問題点、文化面編集の問題点

２６　８８・１０・２５　東京　アジア経済圏の将来と経済面製作

２７　８９・１０・２３　ソウル　韓日経済関係の現在と未来、東アジアの将来と韓日関係

２８　９０・１０・２９　東京　科学技術とマスコミの役割

２９　９１・１０・２８　ソウル　科学技術協力のためのマスコミの役割

３０　９２・１０・２　東京　冷戦後の世界・アジアと韓日

３１　９３・１０・１８　ソウル　転換期の政治とメディアの役割

３２　９４・１０・２６　東京　２１世紀の韓日関係と報道の役割

３３　９５・１０・２４　２１世紀の韓日関係と報道の役割

３４　９６・１０・２１　ワールドカップ共同開催とスポーツ報道

３５　９７・１０・８　済州　２１世紀の韓日関係と報道の役割

３６　９８・１０・２８　東京　２１世紀の韓日関係と報道の役割

３７　９９・１０・２１　済州　韓日間の文化交流とメディアの役割
３８　２０００・１１・１　東京　韓日間の文化交流とメディアの役割
３９　０２・１０・３０　東京　ワールドカップ以後の韓日関係
４０　０３・１０・２８　済州　北韓を見る韓日の視角
４１　０４・１０・２９　東京　北韓を見る韓日の視角
４２　０５・１０・２６　済州　韓日関係再整備の方向と言論の役割

＜日韓編集幹部セミナーの問題点＞

これから分かるように、日韓編集幹部セミナーは日韓国交正常化（１９６５年）直後の１９６６年からコンスタントに会合を続け、日韓言論人の定期的な頭語の場として、貴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討議のテーマになった題目から分かるのは、第１回から第３回まで、その時期に発生した事件について、日韓で相互に討議する形がとられたようである。しかし第４回、５回は総論的な議題になり、さらに、その後は「整理部」（第６回）「教育担当」（第７回）「外信部」（第８回）「文化部」（第１０、１１回）「社会部」（第１２回）と、取材各部門の記者による交流討議になった。このような実務中心の傾向は、その後も「地域・国際ニュース」（第１４回）「記者教育」（同）「読まれる紙面づくり」（第１５回）「技術革新と新聞製作（第１６回）と続いた。第１７回（１９７９年）のテーマは「日韓経済問題」であり、経済部の記者中心であったと想像される。

１９８０年代の初めに開かれた第１８回（１９８０年）は「アジアにおける日韓」、第１９回（１９８１年）は「日韓改善と言論」と総論的討議が行われたが、すぐに整理部（２１回）社会部（２２、２３回）文化部（２４回）家庭部（２５回）経済部（２６回）関係者ガ参加者になったと見られる、実務中心の路線に戻ったようだ。この時期までは、日韓間の歴史認識などについても論議が交わされたと思えるが、意外なことに表だったテーマとしては登場していない。経済部（２７、２８回）、科学部（２９、３０回）とこの傾向は続く。「冷戦後の世界・アジアと韓日」という総論的討議が再登場するのは、１９９２年（第３０回）になってからである。このあとの討議テーマは、「転換期とメディア」（３１回）「２１世紀の日韓」（３２、３３、３５、３６回）「W杯と日韓」（３４、３７回）「日韓文化交流」（３８回）と総論形式が続き、３９回（２００３年）４０回（０４年）になって初めて、北朝鮮問題が本格的に討議の対象に取り上げられる。昨年１０月、ソウルで開かれた第４２回セミナーのテーマは「関係再整備と言論」であった。これは「日韓友情の年」が趣旨とは裏腹な冷却状態に陥ったことを踏まえ、「関係再構築」を志向したものであるのは、想像に難くない。

このようなテーマ別分類から「日韓編集幹部セミナー」の問題点として、①最近のセミナーは総論的討議に終始し、個別具体的な実務的な討議が少ない②北朝鮮問題が０３、０４年になって初登場したのに見られるように、議題が必ずしもタイムリーといえない――が指摘される。また、日韓を往復し、経費をかけたセミナー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開催日数がわずか１日だけであるのも問題である。金泳三・細川政権当時から始まった対話機構「日韓フォーラム」（年１回開催）が、毎回３日間ほどの討議日程を設けているのと対照的である。「セミナー」もせめて２日間ほど時間をかけ、第１日目は総論的協議、第２日目は個別的、実務的議題の討議に当てるなどの工夫が必要であろう。

セミナー参加者数は、日韓ともに十数人というのが恒例である。全国紙、テレビ局、地方紙など満遍なく参加するように配慮されている。しかし、わずか１日の会議としては参加者の数が多すぎ、まったく発言しないまま終わってしまう参加者が散見される。参加者を日韓問題に通じた記者（元特派員など）と、新聞製作の各分野担当記者の２種類に分け、２日間の会議を進行させるのも一方法であろうと考えられる。

さらに問題なのは、このセミナーの討議内容が、韓国側では冊子になって公開されているのに、日本側では公開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これがいかなる理由に基づくものか明らかでないが、些細なトラブルでも忌避する傾向のある日本側の事情が色濃く反映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日本側の討議報告は通常、新聞協会発行の機関紙に記事形式で掲載されているだけであり、これでは不十分である。また、韓国側の「報告冊子」も事務局に保管されているのは数年分に過ぎない。これまで４２回に渡って開催されてきたセミナーの存在が周知されておらず、各回ごとの会議内容から日韓報道の教訓がくみ出されていないのも、このような日本側の「非公開」姿勢が大きく反映している。早急に改善が望まれる点である。

以上、議題や会議日程、参加者、公開・非公開の問題など、セミナーの外形的な側面について考察してきた。続いて一昨年、昨年のセミナー討議の内容を元に、セミナーから汲み取れる教訓は何なのかを検討してみたい。

４、２００４年、２００５年のセミナーから

＜北朝鮮をどう報道するか＞

２００４年の「編集セミナー」では、北朝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問題が、初めて取り上げられた。北朝鮮をどうとらえ、どう報道するのか？　これは日本のマスコミにとって難問のひとつである。日本国内だけでない。日韓のマスコミの視覚差が大きいのも、北朝鮮報道の特徴である。韓国紙の元東京特派員は１９８０年代初め、日本の報道に韓国＝悪、北朝鮮＝善の図式があると指摘し、「多くの日本人記者たちは〔中略〕北朝鮮が自分たちの充足されなかった『革命的ロマン主義』を代行してくれることを願って」いる、と批判した[15]。しかし、金大中前大統領と金正日総書記による初の南北首脳会談（２０００年６月１４－１６日）が実現すると、今度は反対に、日本の新聞のソウル特派員から「韓国マスコミが北朝鮮に甘くかつ温かく（？）、逆に日本マスコミが北朝鮮をきわめて厳しく批判、糾弾している」　と批評されるようになった[16]。

15　イ・ドヒョン「日本の韓国報道は信じられない」（エール出版社、１９８１年）
16　黒田勝弘「ソウルが平壌になる！」（ビジネス社、２００３年）５６ページ

このような北朝鮮報道における日韓マスコミの視角差と混乱は、なぜ起きているのか、その原因は何なのか。結論から先に言えば、北朝鮮（金日成・金正日体制）の本質への把握不足から来ている、と筆者には思える。マス・メディア研究者および報道実務者の立場からすると、北朝鮮報道には「拉致問題に限らず、ウクライナ大飢饉[17]と同じような、とんでもない情報操作と事実の隠蔽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川上和久）　という問題意識を持ちながら、北朝鮮情報の照合と討議を行う努力の積み重ねが不足している、と筆者は考えてきた。「第４１回日韓編集セミナー」が２００４年１０月２９日、東京で開催された際、筆者は日本側議長を務めた。テーマは、前年の済州島会議に続いて「北朝鮮に対する日韓の視点」だった。米国大統領選挙の投票を数日後に控えたタイミングでもあり、有意義な討議ができたと考える。その討議内容を報告するとともに、北朝鮮報道をはじめとする東アジア報道の問題点と打開策を考えたい。

＜ふたつの北朝鮮像＞

「北朝鮮を圧迫すると金正日は戦争を選ぶかもしれない、という見方がある。しかし、歴史的に武力の弱い国が強い国を攻撃した例はほとんどない。北を見る目が偏ると、北の実情もゆがんで見える。実情を正確に見てこそ、正しい展望も出てくる」（朝鮮日報のキムイング北韓専門記者)。「北朝鮮に多くの非があるとしても、追い込むことが得策とは思えない。北朝鮮がソ連・東欧のように崩壊するとも考えにくい。むしろ北朝鮮の暴発により北東アジアに悲劇を生むことを懸念する」（共同通信の安尾芳典・編集委員兼論説委員）

セミナー議長として「国の代表でもなく、所属する会社の代弁でもない。記者個人としての率直な発言をお願いしたい」と、強く要望していたが、基調報告をした日韓２人の見解がこれほど対照的だったのには、いささか驚いた。金氏は、基調報告の冒頭に「北の体制に関する韓国マスコミの見方は２つに分かれる。ひとつは『独裁者が支配する閉鎖的な国』であり、もうひとつは『貧乏だが面子を重んずる国』といったイメージである」と指摘していた。日韓の基調報告の見解も、見事に２つに分かれたのである。

金氏は北朝鮮の核開発問題で直接被害を受けるのは韓国だが、盧武鉉政権には解決に向けて米朝を譲歩させる力はなく、米国と歩調を合わせれば南北関係は壊れ、国内世論も割れると指摘した。安尾氏は、核開発は「北朝鮮の体制維持の手段」と指摘した上で、米朝の衝突を防ぐ上で日韓の役割は重要であるが、「日本の関心の中心である拉致問題への対応を考えると、日朝正常化は難しい」との見方を示した。

この２つの基調報告を受けて、討論を行った。北朝鮮取材６回の経験がある日本人記者[18]は「平壌に行き、横田めぐみさんの娘キム・ヘギョンちゃんのインタビューをした。する

17　１９３２年から翌年にかけて、スターリン独裁時代に起きた大飢饉。６００万人以上の餓死者を出したと言われるが、ピューリツァー賞を受賞した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ウォルター・デュランティ記者は「飢餓などない。そうした報道は悪意に満ちた誇張だ」と否定する記事を送り続けた。ウクライナ国会は２００３年５月「ソ連による大虐殺だった」と宣言。タイムズ社の依頼でデュランティ記者の記事を検証した米コロンビア大学のマーク・フォン・ハーゲン教授（ロシア近代史）は、ソ連政府提供の統計をなぞった“垂れ流し記事”だったと批判した。「朝日新聞」２００３年１１月１４日記事参照。

18　発言者の氏名と所属社名は、セミナーでの合意により、この報告では明記していない。

と北朝鮮に利用されたと非難された。しかし、どういう人間であれ、記者として会うのは当然だ」と体験談を述べた。そして「北朝鮮は金日成の死後３年でつぶれると言われた。金正日は無能だ、というのが日本のマスコミの主流だった。しかし北は１０年たっても生き残っている。なぜ、間違ったのかを検証する作業が必要ではないか」と問題提起した。

これに対して北朝鮮取材１０回という韓国の主要紙記者は「北朝鮮に対する不正確な報道は、取材に制限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実際に平壌に行っても、見たことの２０％も確信が持てないのではないか」と反論した。「北朝鮮はカネ次第の世の中になりつつある。米ＣＮＮやロシアのテレビに取材させる所でも、韓国取材陣には見せない」と体験を話した。別の韓国紙論説委員は「韓国内でも戦争体験を持つ世代と、戦争体験のない世代では視点が異なる。北朝鮮報道は常に賛否両論がつきまとう」と述べた。

この際の「日韓編集セミナー」は、時節柄、米国の北朝鮮政策への言及が多かった。４年前、ワシントン特派員だった韓国紙の論説委員は「ケリー候補の言う米朝２国間協議には不安感がある。６カ国協議の枠組みを維持すべきだ」と主張。しかし、別の韓国紙論説委員は「北朝鮮を対話の場に連れてくるためには、些細な問題は後回しにしたほうがいい」と述べた。ジュネーブでの米朝枠組み協議を取材したことがある韓国紙の編集局幹部は「原点に戻ってきた感じだ。日米は共助体制にあるが、盧武鉉政権は米国に距離を置いている。それが以前とは異なる」と指摘した。

元ソウル特派員の日本人記者は北朝鮮の拉致問題、人権問題などを取り上げた。「韓国では南北和解といいながら、離散家族再会の問題すら進展していない。人権の問題は原則を持って臨むべきだ。韓国政府が努力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指摘。別のソウル特派員経験者は「韓国では日本より北朝鮮に拉致された人が多いのに、なぜ、マスコミの対応が冷淡なのか。『些細なことは後回し』ではいけない。１９８０年代の人権闘争と同じ感覚で取り組んでほしい」と注文をつけた。

これに対して、韓国紙の論説幹部は「韓国のマスコミが拉致被害者に無関心だという指摘は間違いだ」と反論した上で「北朝鮮は何も持っていない国である。しかし、外交的には勝利した。北の力は徹底した情報統制にある」と述べた。これらのやり取りを聞きながら、海外特派員歴が長いベテランの日本人論説委員は「日韓とも漢字を使っており、よく似たところがあるが、表現のニュアンスの差、感覚、センチメントの違いを知ることが大事である」と持論を語った。

＜「ウラン濃縮報道」は大げさだ＞

このセミナーで韓国側から日本の報道内容に不満が出たのは、韓国がウラン濃縮実験をめぐり国際原子力機関（ＩＡＥＡ）の査察を受けた問題である。韓国英字紙の編集局長は「日本の報道は大げさではないか」と苦言を呈した。テレビ局解説委員も「多量のプルトニウムを持ち濃縮実験もしている日本が、センシティブな報道をしたことに不満を持っている」と述べた。これに対して大手紙の元ソウル特派員は「量の問題ではない。国際的なルールを守っているかが問題だ」と反論した。別の論説委員は「韓国の皆さんにはぜひ広

島、長崎を訪問してほしい。なぜ日本の報道がセンシティブなのかが理解できるはずだ」と語った。

上記のような議論を締めくくるように、基調筆者の安尾氏が「北朝鮮に関する情報量は増えたが、周辺情報ばかりで核心は分からない。北の情報を得て報道することが、北朝鮮を誤らせないことになる」と語った。また金記者は「日米韓がよく話し合い、日米が悪役、韓国が良い役を演じることができれば、核問題の解決は早まる」と述べた。筆者は議長としての立場から「今回の論議は、お互いが何を感あげているか分かっただけでなく、その感情までも理解できた。これが直接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もたらす成果だ。日韓双方のメディアは『対話力』を強めることによって、北朝鮮問題の解決に努力したい」と総括した。このように「日韓編集セミナー」の討議は、きわめて率直に行われた。韓国留学の経験もある若宮啓文・朝日新聞論説主幹が、「日韓関係は微妙な問題でも、ざっくばらんに論議できるほど成熟した」と述べたことがあるが、筆者も同感である。

＜北朝鮮報道の陥穽＞

北朝鮮報道をめぐっては、これに先立ち、韓日社会文化フォーラムが主催して東京で開かれた「第２回言論人ワークショップ」でも、討議が行われた。コメンテーターの黒田勝弘・産経新聞ソウル支局長（論説委員）が「最近、韓国マスコミの北朝鮮報道にはあきれることが少なくない。あるテレビ局は『北韓・グルメの旅』といった内容の番組を流していた。あまりにひどい。テレビに向かったモノを投げつけたほどだ」と、ソウルの最新事情を紹介した。これに対して、イ・ビョンソプ文化日報政治部次長（前東京特派員）が「それは北韓の文化紹介といったレベルの番組ではなかったか」と異議を唱えた。なかなか面白い光景だった。ワークショップ第一部の討議では、鄭大均・東京都立大学人文学部教授（日韓比較文化論）が「韓国は最近、『反共国家』の性格が弱まったが、『反日国家』の性格は、むしろ活性化したのではないか」と問題提起した。韓国側からは否定的な答えが多かったが、司会者の鄭求宗・東亜ドットコム社長から発言を求められた前出の若宮主幹は「小説家の韓水山氏は幼かったころ、学校の習字の練習に『反共』『反日』のいずれかを書くように教師から指導されたそうだ」と、エピソードを紹介した。

若宮主幹はさらに「産経新聞の子会社（扶桑社）が歴史教科書を出版したことで、新聞社自身が（歴史紛争の）プレイヤーになった」と違和感を表明した。これに対して、第２部コメンテーターの黒田・産経新聞ソウル支局長が「来年、教科書問題がまた噴出した場合、盧政権側と対立している朝鮮日報や東亜日報などが過剰に反応し、それを朝日新聞が日本に伝えて、紛糾に輪をかける事態も考えられる。メディア側は冷静に対処すべきだ」と反ばくするというシーンも見られた。

金忠植・東亜日報東京支社長（２００２年当時）は、日本の韓国・北朝鮮報道について率直な意見を表明してきた。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村山喜一会長）が２００２年１２月２１日に行ったシンポジウムでは「拉致報道を見る目」と題して次のような話を行った。「昨夜のニュースステーションに、北朝鮮の政治収容所出身だという人が出演した。今は韓国

のある月刊誌の記者になっているその人 は、『九〇年代末の北朝鮮の餓死者が２００万人にもなる』と主張した[19]。これを見ながら、私は日本のマスコミは情けないと思った。偽造、誇張、歪曲になんの濾過装置もないからである」[20]。確かに、北朝鮮での餓死者数についてはいまだに定説がない。正確な数値の把握はウクライナや中国の大飢饉と同様に、体制変革があった後に初めて可能であるとも思う。ただ「北朝鮮の餓死者２００万人」説の根拠として、ファン・ジャンヨプ労働党元書記の証言、韓国のＮＧＯ「民族助け合い仏教運動本部」の調査、米ジョン・ホプキンス大学公衆衛生研究所の調査・分析などが知られているのも事実である[21] 。したがって金氏が「私の考えとしては、その数値は信頼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述べるだけで、なんら反論の具体的な根拠も示さないまま、脱北者の発言を「偽造、誇張、歪曲」と断定するのは納得できない。そして、このような問題提起―反論―再反論を通じて、日韓が「北朝鮮の真実」解明に至る道も開け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筆者が提唱している常設「日韓メディア・ウオッチ」の意義も、そこにあると考えている。

＜２００５年セミナーを考える＞

第４２回韓日編集幹部セミナーは、２００５年１０月２６日、ソウル・プラザホテルを会場に開かれた。テーマは「韓日関係の再整備の方向と言論の役割」だった。韓国新聞放送人協会が編集したセミナーの速記録をもとに、同セミナーを検証してみたい。日本側の主題発表は時事通信の佐々木真・編集委員（元ソウル、北京特派員）が行い、韓国側の主題発表は東亜日報の金忠植・論説委員（前東京支社長）が行った。

佐々木氏は「マンガ嫌韓流」や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２ちゃんえる」で乱舞する反韓機運を紹介しながら、毎日新聞の世論調査で韓国に親近感を持つ日本人は４４％で、親近感を感じない日本人５４％より少なくなっている現象を指摘した。一方、韓国側でも反日民族主義が表出していることを憂慮し、歌手・チョウヨンナム氏の舌禍事件、大学講師・水野俊平氏に対する韓国インターネットでの攻撃などに、遺憾の意を表明した。金忠植氏は１９９３年の「韓日編集幹部セミナー」のため訪韓した毎日新聞の清水幹夫論説委員の主題発表を引用しながら、「今日我々が論議しようとしている大部分の論点が集約されている」と述べた。清水氏が指摘したのは①歴史に学ぶ②過度のナショナリズムを戒める③日韓言論間の温度差を解消する――といった点だった。金忠植氏の主題発表には筆者も同感する部分が少なくないが、誤解にもとづく発言も散見される。ここではひとつだけ指摘しておきたい。

同氏によると、２００２年夏、東京・多摩川にアザラシ１頭が現れた。日本のマスコミはこれを連日のように報道した。ところが、このころ７３１部隊（細菌部隊）に関する最高裁判所の判決があったのに、朝日新聞をのぞく新聞・テレビはほとんど報道しなかったという。「これが日本と隣国の心の距離感ではないか」と思ったという。しかし、これは何

19　姜哲煥記者（「平壌の水槽」著者）のことを指していると思われるが、同記者は「月刊朝鮮」の記者ではない。朝鮮日報統韓問題研究所の記者である。
20　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編「どうなる日朝国交交渉」（彩流社、２００３年）３８ページ
21　Ａ・Ｓ・ナチオス著、古森義久監訳「北朝鮮・飢餓の真実」（扶桑社、２００２年）ほか参照。

かの誤解か勘違い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筆者が日本の新聞のデータベースで調べたところ、２００２年夏にあった７３１部隊関連の判決は、同年８月２７日に最高裁ではなく（同氏は、記憶が正しければ、と断っている)、東京地裁で行われた判決しかない。そして、この判決についての報道は、同氏の記憶とは異なり、読売新聞『７３１部隊細菌戦を初認定／「被害１万人以上」賠償請求は棄却／東京地裁』(2002.08.28 東京朝刊、35 頁、871 字)、毎日新聞『旧日本軍・７３１部隊訴訟／細菌戦の存在認定／賠償請求は棄却－－東京地裁判決』(2002.08.28 東京朝刊、31 頁、社会面、９４７字)、産経新聞『７３１部隊訴訟／中国人遺族らの請求棄却／「細菌戦」は初認定／東京地裁判決』(2002.08.28 東京朝刊、31 頁、第１社会面、５２９字）である。朝日新聞以外の新聞もそれぞれに報道しているのである。ちなみに朝日新聞の判決記事は『細菌戦の存在認定／原告請求は棄却／７３１部隊訴訟、東京地裁判決』(2002.08.28 東京朝刊、１頁、１総、１０５７字）であり、記事の総行数は毎日新聞と大差ない。このような事実誤認を元に、「朝日新聞をのぞく新聞・テレビはほとんど報道しなかった」「これが日本と隣国の心の距離感ではないか」と批判するのは、妥当ではない。

なぜ、このような誤解が生まれたか。その理由について明らかでないが、同氏の誤った指摘に対して、セミナーに参加した日本側関係者がなんらの批判を行わず、沈黙していたことが、筆者の目にはとてもいぶかしく思われる。「横並び」を特徴とする「日本の新聞の常識」からすれば、社会的な関心事になっている裁判の判決をめぐって特定の新聞だけが特筆大書し、他紙がほとんど無視することはありえないからである。「そんなことがあるだろうか？」と日本側出席者は疑問に思わなかったのだろうか。日韓報道の検証・討議に当たって、個別のファクトに基づいた議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当然である。あえて苦言を呈しておきたい。

５、おわりに

筆者は上記のようなマスコミ内部の誤解を解くためにも、常設的な機構として「日韓メディア・ウオッチ」の設立が必要であると考える。日韓の報道比較研究の分野においては、韓国外国語大学教授・金政起氏らが調査に参加した「日韓２１世紀委員会」の「過去１０年間における日本の韓国・北朝鮮報道の内容分析」「韓国新聞の日本関連報道に関する研究―１９８０年代を中心にして」などが知られている。それぞれに報道の量的分析と内容分析を行い、「韓国紙の日本関連報道では、主義主張の入った記事が９０・５％もある」と指摘するなど、興味深いデータが少なくない[22] 。

この調査から約１５年。日韓のメディア研究者は再び日韓相互の報道に関する総合的に調査が必要になってきた、と筆者は考える。１９８０年代と比べると、そこには①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の急成長②南北首脳会談の実現（００年６月１５日）など南北関係の改善③日韓間における歴史認識問題の深刻化④「韓流」などによる日韓国民交流の活発化、

22 「日韓２１世紀委員会参考論文集」（日韓２１世紀委員会、１９９１年１月）

など大きな環境変化が見られる。このような変化がマスメディア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さらに日韓両国民の相互認識にどう関係があるのか。こういった問題が改めて問われる時点に来ているのではないか。日韓の相互報道を日常不断にチェックする「日韓メディア・ウオッチ」設立の必要がある。以上を提言し、報告を終えたい。

지정토론

황 영 식(한국일보 논설위원)

1. 나라는 다르지만 언론계 선배이고, 한일 양국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시모카와 선생님이 제안한 '한일 미디어 워치' 구상에 대해, 그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양국 언론인 사이의 오랜 대화나 다짐이 실제로 보도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대개의 교류나 토의가 일시적인 것이거나, 정례적인 것이더라도 실제 참가자가 바뀌어 그때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데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뤄진 논의 결과라도 서로가 기록하고 전파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시모카와 선생께서는 한국에서는 그나마 제대로 출판물로 엮어져 나온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기자들이 얼마나 그런 출판물을 읽는지는 의문입니다. 관련단체가 많아서 예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한일 미디어 워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물이 다른 지침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참고용으로 전파될 수 있다면 적지 않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짜고, 어떻게 운영하고, 실질적 성과를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과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처럼의 좋은 구상과 제안이 무관심 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보다 근본적인 우려입니다. 어쩌면 일본 관련 보도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당면 과제는 일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도하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급격하게 흐르고 있는 국민의 관심이 동북아 국가 국민다운 균형감각, 즉 최소한 일본과 중국을 저울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감각으로 되돌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관련 노력이 당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 시모카와 선생님 말처럼 한일 양국 언론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에는 모종의 '미디어 프레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디어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를 수용하는 독자나 시청자, 네티즌의 의식의 근저를 지배하고 있는 '관습 이데올로기'에 미디어가 추종한 결과입니다. 미디어가 적극적 선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선동이 통한다는 기대 자체가 수용층의 성향과 잠재의식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정치와 학문, 언론 등 전체적인 문제의 단면일 뿐입니다.

최근 과거의 미디어 프레임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과 일본이 관련된 한국 내 문제에 대한 전통적 시각의 근저인 '한국적 민족주의'의 강고한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념 지향적 태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는 있지만 이 분야에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싹트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용층의 인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6년 이상의 일본 생활에서 체감했던 막연한 생각들이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해 확인되는 데 대해 적지 않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상대적으로 일본 언론, 학계의 잣대가 한국에 비해서는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이나 학계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부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미덕일 수 있고, 그것은 한일 언론의 문제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 최근 저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지가 와타나베 요미우리 주필 겸 회장의 태도를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반대나 진솔한 역사반성과 사죄, 청산 주장이 모두 개헌과 보통국가로 가는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보수본류의 염원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주장해 온 반성과 사죄, 청산이 도대체 무엇이 됩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야 이런 진퇴양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선과 악을 미리 재단해 놓고, 어떤 노력과 변화도 고려하지 않으려는 태도야말로 고정관념이고, 이런 고정관념을 양국이 서로 풀어가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때 박정희 시대에 배운 모든 것들을, 과장하자면 구구단까지도 부인하려고 했듯, 한일 양국이 가져온 모든 고정관념을 일단을 두들겨 부수는 것도 과도적인 지혜이고, 길게 보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 고정관념을 깨는 노력은 반드시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시모카와 선생께서 '우익단체'란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런 용어부터 수정해 가는 것들이 한 예입니다. '우파'나 '보수파', 또는 보수파도 스펙트럼을 갈라서 '강경 보수파' '온건 보수파' 등으로 나눠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중국적 이데올로기의 색채가 짙은 '군국주의' 같은 말은 폐기할 때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군사대국'도 '군사강국'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적 잣대와 동떨어진 주관적 과대평가나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조금씩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논설위원실에서는 이성적 태도를 정착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해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독 산케이 신문이 엉뚱한 각도에서 제 글을 인용해서 쓴웃음을 지은 일도 많습니다.

6. 정치 지도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적 분위기는 알게 모르게 개인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크게 유감스럽습니다. 흔히 활발한 민간교류를 들어 상관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적 마찰만 없었어도 한류의 물살을 탄 지금쯤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연간 350만, 400만명에 달했을 겁니다. 지방의 사정은 심각합니다. 부산이나 제주도 관광업계는 주름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쪽에서는 이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어도 현재의 대일 정책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 앞장 서서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북일관계의 전망과 한일관계

– 강태훈(단국대 교수)

지정토론 – 이원덕(국민대 교수)

프 로 필

강태훈 (姜太勳, 단국대학교 교수)

New York University, 정치학박사, 지역정치 전공.
日本 東京大學 客員敎授,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21세기정치학회 부회장, 21세기정치학회 부회장.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주요 저서 : 『일본외교정책의 이해』 『국제정치의 패러다임과 지역질서』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외 다수.
주요 논문 : 「일본의 정치개혁과 정치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정상회담과 미·일의 한반도 정책」 「전후 일본의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 외 다수.

북일관계의 전망과 한일관계

강 태 훈(단국대)

I. 북일수교교섭의 전개

일본에게 있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수교국은 오직 북한뿐이다. 이는 일본의 외교적 리더십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타 강대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일본은 마지막 전후처리의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수교교섭을 시작하였다. 북일수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의 일각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우선 북일관계 정상화의 전개 과정과 수교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북일 수교교섭이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냉전이 종식되기 전 까지 북한과 일본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어왔다. 냉전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 왔던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편향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물론 1970년대 초반 데탕트기에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정부차원의 교류는 없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이 나오자 북한과 일본은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1991년부터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에 돌입하였다. 1992년까지 8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핵미사일문제와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이은혜' 문제가 불거져 나옴으로서 제1단계 북일 수교교섭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제2단계 9차 북일 수교교섭이 7년 반 만에 개최되고 10차, 11차 회담도 계속되었으나 핵미사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식민지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전 없이 끝나고 말았다.

북일 수교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02년 9월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10월에 북일 수교회담이 재개되긴 하였으나,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에 대한 김정일의 고백, 연이어 발생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개발의혹 등 대북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회담은 공전되고 말았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대북여론 악화, 북한으로부터 유엔 핵사찰 감시관의 추방으로 일본은 대화 보다는 대북압박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2004년 고이즈미 수상은 제2차 평양을 방문하였으나,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만 귀국하고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온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

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04년 12월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북한 핵문제는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에서 다루고 있으나 북한이 제5차 회담 2단계 회의에 북한의 위폐, 인권 문제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현재 6자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다. 2006년 2월 북경에서 3년 3개월 만에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핵미사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식민통치 사죄와 보상문제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II. 북일 수교교섭의 쟁점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는 일본인 납치문제, 식민통치 사죄와 보상문제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의 쟁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1991년 11월의 북일수교 8차회담 때 KAL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켰다는 '이은혜'라는 여성이 일본인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이 1997년 3월 한 신문 인터뷰에서 1988년 10월 평양 근교에서 요코다 메구미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함에 따라 일본인 납치의혹은 더욱 심화되었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2002년 9월 역사적인 평양 방문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에 관해 시인하고 공식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피랍 일본인 11인 중 5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인들은 고이즈미-김정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북여론은 악화되었다. 북한은 납북 일본인 5명의 생존자의 일시 귀국을 허용하였다. 일시 귀국한 생존자 5명이 일본에 잔류하게 되고 북한 거주 8명의 가족의 영구 귀국과 사망 및 행방불명자 8명에 대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북일간의 갈등은 한층 고조되었다.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2차 방문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의 재조사 합의를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납치 피해자 가족 5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고이즈미의 2차 방문 후, 북일간에는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무수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인 남편과 두 명의 딸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3차 실무자 회의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온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의 검사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밝혀짐에 따라 2004년 12월 12만 5천톤의 식량지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고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 연합회'는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북경제재를 요구하였다. 제4차 6자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2006년 2월 국교정상화 교섭이 북경에서 3년 3개월 만에 재개되었으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 식민통치의 사죄와 보상문제

북한은 일본에게 당초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항일 빨치산 투쟁을 교전당사자의 증거로 간주하여 식민통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후에는 교전 당사자로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넓은 의미에서 식민지지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 북한이 교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며 한일국교정상화 때처럼 청구권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방문 때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면서 과거청산 및 배상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사죄에 대해서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답습하고 보상은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며 1945년 8.15 이전의 청구권을 상호포기하고 무상지급과 저금리 장기차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 3개항의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북한 측의 대폭 양보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북한은 '일괄적 경제협력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당시의 강제연행이나 종군위안부 문제는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북한 핵문제

일본은 수교교섭에 임하는 기본원칙의 하나로 북한의 핵문제 타결이 북일수교의 주요의제임을 밝혀왔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핵확산방지정책에 부응하고 일본의 안보위협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수교교섭 초기부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1998년 일본 상공을 넘어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베를린 북미미사일합의가 이루어 진 후 일본은 북한과 대화에 중점을 둔 노선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평양방문 이후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여론의 악화와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 의혹 등으로 일본은 대화 보다는 압박정책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본이 선택한 것은 북한선박 검사강화 및 대북 수출기업수사, 해외송금 규정 준수에 대한 감시강화, 경수로사업 중단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 8월 베이징 6자회담에서도 대표연설을 통하여 북한 핵의 개발, 보유, 이전 불용, 국제적합의 준수, 검증 가능한 방식에 의한 신속한 폐기 등을 언급하면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를 북일 국교정상화 이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체제보장 대가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참가국들은 동의하였다. 그러나 상호신뢰가 부족한 북미가 공동선언의 이행계획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

의적이다. 미국은 핵동결 자체를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은 폐기 이전의 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문제도 미국은 핵폐기와 핵비확산조약 복귀, 국제원자력기구 세칙준수 등이 이루어 진 후 제공문제를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선 핵폐기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II. 수교교섭의 전망과 한일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핵문제와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사죄와 보상 문제는 고이즈미 1차 평양 방문 때 양정상 끼리 합의한 무라야마 수상의 사죄 발언과 경제협력 방식으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는 4차 6자회담의 타결결과 9.19공동선언이 나옴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하였으나 이행계획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핵문제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관계 정상화를 가로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 가족 연합회'는 자민당 정치권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북한 핵 문제 및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경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과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정치가들도 대북 압박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 정치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이 국민 여론의 동향을 거슬려 대화를 주장할 만큼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치가들이 지금 당장 북한에 경제제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만이 경제제재를 했을 때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과 미국의 정책이 6자회담 유지에 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경우는 일반 정치가들과는 달리 북일수교를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으며 북일교섭을 강조해 오고 있다.

여하튼 극도로 악화된 대북여론에 발목이 묶여 일본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컨데,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한일공조를 통하여 북미간의 중재적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압박 보다는 대화에 역점을 두면서 수교회담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가져야만 납치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핵문제의 해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대북접근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물론,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해결에 양국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타파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공유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가진 국가로 변모시킨다면 이는 한일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왔던 수동적인 대북정책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식민지배의 결과 초래된 남북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일수교 교섭이 한일관계에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가 식민지 사죄와 보상 문제이다. 일본은 1965년의 한일조약의 타결 수준에 맞추어 북일수교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과 같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문제를 기본조약에 삽입할 수 없고 경제문제는 '배상 및 보상'이

아니라 '재산, 청구권'문제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한 구 조약의 원인무효와 식민지지배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일조약과의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입장을 바꾸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보상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처리 할지라도 한일조약에서 다루지 못했던 종군위안부, 사할린동포와 원폭피해자 문제 등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었기에 한일간에는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북일 수교과정에서 한일조약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북일수교를 계기로 한일조약에서 다루지 못했던 종군위안부 등의 인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진정한 한일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간단한 요약입니다.

북일수교는 북한의 핵문제,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고이즈미 수상은 자신의 임기 내에 북일 수교라는 외교적 업적을 남기고 싶으나 핵과 납치문제의 난제로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납치문제에 발이 묶여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핵문제 등의 해결방법에 이견이 있을지라도 북한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진 체제로 변모시킨다는 공동의 비젼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식민지 사죄와 보상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한일조약의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식민지 지배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보상을 경제협력 방식으로 할지라도 한일조약에서 다루지 못했던 종군위안부나 사할린 동포문제 등의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북일수교를 계기로 한일조약에서 다루지 못했던 종군위안부 등의 인도적 문제를 시정하려는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진정한 한일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토론

이 원 덕(국민대)

(별 지 참 조)

종합토론

사회 – 정　형(단국대 일본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 이광래(강원대), 김유경(경북대), 황영식(한국일보), 이원덕(국민대)